

제428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8월25일(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

(14시05분 개의)

○소위원장 김소희 의사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제1차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부처별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는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인들이 계신가요?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예.

○조은희 위원 제가 예결위원회라 가서 질의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냥 이걸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예, 제가 상정은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시06분)

○소위원장 김소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한 분이 오셔 가지고.

오늘 예결위가 있어 가지고……

심사 방식은 지난 18일 전체회의 시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서면으로 제출하신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기후대응기금에 대해 정부 측에 요구할 시정요구 유형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 이상 다섯 가지 시정요구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을 해 주시고 기재부 제1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는 기재부를 포함하여 총 8개의 부처가 출석하고 있습니다. 심사 대상 기관과 건수가 많은 만큼 정부 측에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심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말기에도 깔려 있고요. 하지만 필요하신 분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목차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사항, 세입, 세출. 특히나 세출은 기재부뿐만 아니라 집행을 담당하는 각 부처별로 목차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대의견까지 자료가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과 세입 그리고 세출의 기획재정부 소관까지, 9쪽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총괄 사항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부적합한 사업 목록이 표로 첨부돼 있습니다. 28개 사업인데요. 이 사업들은 감축 효과를 명시화하기 어렵거나 국내 감축 효과가 미미해서 기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회계로 이관하거나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3쪽의 세입입니다.

세입 총괄 사항인데요.

수입 추계의 현실성이 부족하고 계획의 자체 변경이 반복되어서 사업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유상할당 비율이 저조하고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여 자체수입이 축소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단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최근 이삼 개년 수급을 반영한 세입 추계모형을 도입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유상할당

비율 상향, 초과공급 흡수장치를 포함한 제4차 할당계획 개선안을 마련하고 자체수입 변화 로드맵을 수립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다음 4쪽, 기타재산이자외수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유상할당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당초 수입 계획액 대비 수납액이 감소함에 따라서 기금계획을 변경해서 24개 사업에서 1045억 원이 감액되는 등 기금 운용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다음 지적사항입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응기금 수입 중 배출권 매각대금 비중이 8.1%에 불과하고 낮은 수납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7쪽을 보시면,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시 적정한 유상할당 비율을 설정하고 배출권거래제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기금의 자체수입을 제고하는 방안 그리고 안정적 수입원을 추가로 발굴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상할당 비율이 20% 이상이 되도록 수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요.

셋째로, 25년 배출권 매각대금에 따른 자체수입의 구체적 산정 근거를 국회에 보고하고 분기별 집행 점검 및 조정 절차를 제도화하며 수입 증가 로드맵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8쪽, 기금 예수금입니다.

지적사항은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하여서 기금을 운영 중인데 25년까지 누적 예수금액이 1조 3725억 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자 지출이 증가하고 예수금 상환을 위해서 또 추가로 예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십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하단에 예수금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안정적 운용을 위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9쪽, 기재부 소관 세출 사항입니다.

공자기금 예수 이자 상환인데요. 지적사항은 배출권 판매가격의 하락 추세와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서 공자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예수금 이자가 매년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십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하단에 기후대응기금 확대를 위한 방안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증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예수금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내용을 보시면 총괄, 세입, 세출 부분에 기획재정부에서 주로 답변하실 내용 위주로 먼저 끊었고요.

그래서 정부 측, 기재부 의견 먼저 말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총괄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저희가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간상 제약이 있어서 시정요구사항 문안에 대해서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정요구사항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의 경우 다른 회계로 이관하거나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세입 부분입니다.

3페이지 하단에 있는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삼 개년 경매낙찰가·낙찰률·거래시장 수급을 반영한 세입 추계모형을 도입할 것’,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 그 아랫부분은 환경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환경부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본바 수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제가 수용 의견을 내겠습니다. ‘환경부는 유상할당 비율 상향과 초과공급 흡수장치를 포함한 제4차 할당계획 개선안을 관계 부처와 마련하며 기금 자체수입 다변화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시정요구사항에 동그라미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만 그 가운데 둘째 줄에 보면 ‘전체 계획기간의 실질 유상할당 비율이 20%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는 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이고 아직 확정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숫자를 제외해 주시고 ‘유상할당 비율이 상향되도록 설정하는 등’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이 문구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 ‘기획재정부는’부터 쭉 있는 표현에서 맨 마지막 문구를 보시면 ‘향후 기금 수입 증가 로드맵을 작성하여’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수입 증가 방안을 마련하여’라고, 로드맵은 저희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증가 방안을 마련하라고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이라고 돼 있는 요구사항은 제도개선으로 좀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의 시정요구사항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의 세출 부분 기획재정부 시정요구사항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수용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정부 측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말씀 주신 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신 위원님들 중심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시간 그게 전혀 없어서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되고요.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총괄 부분부터……

○**박지혜 위원** 총괄 부분은 제가 의견을 냈는데요. 한 가지, 그러니까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지금 이 지적사항 같은 경우에 기후대응기금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어떤 원칙이나 목적을 가지고 기금 수입이 이 정도 예상되니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두괄식으로 했다기보다는 부처별

관련 사업을 취합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뒤에 부대의견 같은 것에도 보면 감축사업을 위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 비감축사업 같은 경우에 조금 비중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저는 원칙을 잘 수립하고 기금에 편성돼야 되는 사업에 대한 지침을 기재부가 정확히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꼭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낸 의견 중에 부적합한 사업 목록은 사실 저희가 직접 작성했다기보다는 외부에서 한 번 이상 이의가 있었던 사업들의 목록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꼭 이 사업들을 반드시 다 빼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외부에서 이런 사업들은 감축 효과가 미미하거나 이 기후대응기금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사업 내용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외부의 의견이 있는 사업들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안 그래도 박지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28개 사업을 다 빼야 되나 위원님께 여쭤보려 그랬거든요.

○박지혜 위원 그 취지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소위원장 김소희 그래서 저희가 28개 사업을 보기는 다 봤어요, 저도. 첫 번째, 두 번째는 어쨌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부분인데 이것은 일단 어쨌든 탄소중립기본법 70조에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국제협력기금 사용 안에 그 명시가 되어 있어서 뒤에도 또 보니까 산업부하고 환경부에서 이 사업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을 부적합으로 바로 빼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향후 부처 의견을 듣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주의를 줘야 되는지 그런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고.

앞서 박지혜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게 기재부가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하게 하셔야 될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처에서 오셔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부처 간 협의된 내용도 별로 없었고요. 기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잘 운영을 해 주시고 박지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을 적극 반영해 주셔 가지고 다음 번 할 때는 좀 체계적으로 될 수 있게끔 그 내용을 추가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지혜 위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별로 없으셨는데 7페이지에 지금 밑줄 그어진 부분이 유상할당 비율만 그어져 있는데요. 이게 실질 유상할당 비율이 20%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해당 위원님의 의견이고, 지금 현재 실질 유상할당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4%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이걸 높이자는 건데 저는 사실 이 숫자를 빼면 지적하신 위원님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 단순히 상향이라고 하면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위원장 김소희 이것 배출권거래제에서 논의돼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박지혜 위원** 그렇기는 한데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도 여쭙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지금 배출권거래제에서 할당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특위에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유상할당 비율이 점차 증가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여기서의 리스크는……

○**박지혜 위원** ‘대폭 상향되도록’으로 하면 안 되나요?

○**소위원장 김소희** 적절한 문구를 환경부나 관계 부처에서 좀 주시면 이것은 금방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부담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기재부에서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습니다. 아직 이 부분은 관계 부처랑 한창 협의 중이라서 저희가 숫자를 받기에 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그렇지요? 관계 부처가 의견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김용태 위원** 저도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말씀하시면 마이크가 켜집니다, 이게 지금 전체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김용태 위원** 기업들의 감축효율이 높아도 기업 성장 및 생산량 확대로 탄소배출량이 증가하는 문제는 어떻게 고민해 봐야 되는지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단순히 BM 할당 확대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가령 감축효율이 우수한 업체에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할 그러한 문제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두 번째로 아까 같은 말씀인데 유상할당 비율 상향에 대해 10%, 20%, 30% 이러한 비율을 설정한 시나리오가 부담스럽다고 하신 말씀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처별로 아직 의견이 없어서 부담스럽다는 말씀하신 걸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의견이 없다기보다 지금 한창 작업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것이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태 위원**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9월 말까지 결정이 되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건 지금 환경부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9월 말까지 결정되는 거지요?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입니다.

지금 할당 계획에서 정할 사항인데 저희가 가능하면 9월 말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계 부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유상할당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저희가 여기서 정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현재 유상할당 비율 4%보다는 훨씬 더 증가된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하셔야 될 거잖아요.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맞습니다. 이번에 할당 계획하는 것이고 작년 말에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했는데 기본계획에서는 현재의 유상할당 비율보다 올리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는 높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4%인데 5%로 높인다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정현 위원** 대체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은 높인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저희가 대폭 상향하겠다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대폭 상향의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협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득구 위원** 최소한 로드맵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향하도록 하는 것과 좀 구체적인 로드맵과는 다른 것 아닌가요? 차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로드맵도 결국에는 수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번에 정할 때 5년 치를 다 정할 계획인지는……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2030년까지의 유상할당 비율을 정할 것이고요. 또 저희가 지난번 기본계획은 3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35년까지 대폭 상향해서 간접배출도 제외를 검토할 정도로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라라고 한 취지였습니다.

○**강득구 위원** 어쨌거나 유상할당 비율에 따라서 배출권 가격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10%, 20% 이런 부분들을 좀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말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관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정 이해하나 ‘상향하도록’과 나름대로 로드맵을 갖고 부처 간에 협의하고 합의해 가는 과정들, 이런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김용태 위원님이나 김소희 위원장님이나 모두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큰 틀의 로드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우리 의회의 큰 틀의 요구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연차별 계획을 로드맵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그 연차별 계획안에 대해서는……

○**강득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로드맵 정도는 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이 건에 지금 유상할당 비율이 숫자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괜찮은 안을 주시면 제도개선 정도로 수용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기재부차관께서 의견을 주셨던 ‘기금 수입 증가 방안을 작성하여’, 그런데 강득구 위원님께서 기금 수입과 관련된 유상할당이랑 연결된 부분이니까 ‘수입 증가 로드맵’ 원래의 멘트대로 이 부분을 유지하자라고 의견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 예.

○**소위원장 김소희** 그래서 시정 부분은 위낙 준비를 안 하셔 가지고 제가 좀 세게 드렸는데, 이것은 낮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합한 문구 의견을 주시면 그것은 바로 합의해서 다음 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할당 비율에 제 개인 의견이 있지만 여기서는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런데 로드맵이라는 것은 정하는 문제고 시나리오는 검토안일 텐데 목표치별로 검토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차관님, 로드맵은 정하는 문제고, 어찌 되었든 시나리오라는 것은 안인 거잖아요? 적어도 기재부라든지 관계 부처에서 시나리오만큼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밑에 세 번째 동그라미

의 로드맵은 저희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수정을 하고요. 중간……

○**소위원장 김소희** 시나리오로 반영해서 그 정도로 이해하셔서 로드맵을 작성해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가운데에 있는 ‘실질 유상할당비율이 20% 이상’ 이 부분은 상향으로……

○**박정현 위원** 숫자를 빼자는 얘기지요.

○**소위원장 김소희** ‘유상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상향되도록.

○**소위원장 김소희** 상향되어야 된다는 것은 지금 다 전반적인 의견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김소희** 최소한 형용사라든지 뭐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배출권특위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푸시를 잘 못 하는 상황입니다.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입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담은 표현이 있는데, ‘대폭 상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부처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소위원장 김소희** 그러면 일단 ‘유상비율 대폭 상향’으로 수정해서 제도개선을 받고 구체적인 숫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특위에서 또 논의를 해야 되니까 그 내용은 거기서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수입 증가 로드맵은 그대로 받아 주셨으니까 제안하신 대로, 저는 주의 정도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지금 기재부에서 너무 안 보신 것은 맞는 것 같거든요.

주의 받고 조금 더 개선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제도개선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뒤에 어차피 주의를 받으셔야 될 사항들이 남아 있으니까 제도개선으로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에 대한 의견은 혹시 있으실까요, 위원님들? 세출 관련해서 이소영 위원님하고 강득구 위원님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지혜 위원** 저희가 지금 8페이지까지만 의견을……

○**소위원장 김소희** 9페이지까지 기재부에 해당되는 내용은 보고를 일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8페이지에 대한 기금 예수금도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겠다라고 말씀 주셔서, 공자금 관련해 가지고는 제도개선 하겠다라고 기재부에서 말씀을 주셔서 강득구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강득구 위원** 예.

○**소위원장 김소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10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일괄적으로 보고받을까요?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10쪽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사항입니다. 19쪽까지가 산업

통상자원부이기 때문에 19쪽까지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탄소중립형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정산 완료에 과도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시정요구사항으로 하단에 보시면 국회 결산 시 이 사업의 정산 현황에 대한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산기간을 단축하고 지연 시 폐널티, 전담기관-수행기관 간 월별 잔액 마감 파악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11쪽,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투자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민간대행비를 전액 교부한 문제 그리고 대규모의 전담기관 이월이 발생하는 등 실집행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고 국가재정법상 이월 요건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하단에 최종 협약 체결 전 교부 금지를 지침에 명시하고 협약 무산 시 즉시 반납 및 대체과제 자동전환 규정 신설, 전담기관 월별 협약·집행 공개 의무화 등의 방안을 시행하라는 시정요구입니다.

다음 12쪽,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기존 사업보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목표 대비 효과가 부족할 우려가 있고 22년의 경우 대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융자 건이 발생한 바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하단에 보시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 제고 및 다른 용도로의 자금 사용의 사전 방지를 위해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13쪽, 산업계순환경제기반구축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과의 연관성이 떨어지고 감축 효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하단에 보시면 기금 사용 용도에 부합한지 검토하여 사업에 대한 재설계를 면밀히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다음 14쪽,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24년에는 특구 지정 기준 등 관련 추가적인 절차가 추진되지 못하여 예산을 전액 불용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15쪽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특구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특구 모집을 조속히 추진하며 정의로운전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16쪽,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입니다.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 사업은 단열·창호 시공 또는 냉·난방기 교체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냉·난방기는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 그리고 기후 적응 및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기금의 취지와 맞지 않는 문제 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저소득층의 단열·창호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우선으로 하고 단순 냉·난방기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 이관하여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다음 17쪽,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사업입니다.

16년 이후 사업 재편 유형이 탄소중립에 해당하는 경우는 3건에 불과하며 기금 및 사업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 낭비 사례에 속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다음 18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 재편 유형이 탄소중립에 해당하는 기업에 지원하고 대기업이 신산업 진출 등 산업 재편 분야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기금 및 사업 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염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또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19쪽, 탄소중립대응사업재편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탄소중립과 관련성이 낮은 분야에 일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셨고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그래서 탄소중립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 그리고 재편계획 승인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정부 측에서,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승렬 실장님 나와 계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 이승렬** 예.

○**소위원장 김소희** 이 의견은 이승렬 실장님 통해서 의견 개진 듣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의견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 이승렬**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이승렬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는 바인데 중간에 한두 개 정도 조금 의견이 있는 부분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페이지에 있는 탄소중립형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은 저희가 제도개선 사항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시정요구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저희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온실가스 감축사업 관련해서 협약 체결 전 교부금 지급 방지 및 집행 투명성 강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시정요구사항대로 저희가 사업운영지침을 개정하거나 또는 온실가스국제감축 포털에 공개를 하는 등 말씀 주신 대로 시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으로 돼 있는데 저희 산업부 입장에서는 제도개선 정도로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지적해 주신 바가 타당하나 이게 특별히 사업을 시행하면서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좀 더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취지라면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으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 사업에 대해서 융자지원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

적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대로 저희가 개선을 했거나 또는 할 예정이고요. 제도개선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업계순환경제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재설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정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설계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하고 의견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에 대해서 정의로운전환 특구 지정 계획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주의 및 제도개선의 시정요구 유형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산업부에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의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부분 중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타회계(기금)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을 주셨는데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시정요구사항에 지적해 주신 대로 단열이나 창호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우선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냉난방기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기후 대응이랑 좀 관련이 적다 이런 취지의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냉난방기 교체 지원을 할 때도 1등급 기기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또한 기후대응기금의 그런 어떤 취지에 좀 부합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개선은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17페이지,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사업에 기금 및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주의 및 제도개선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시정요구사항에 있는 말씀을 최대한 수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이 제도개선 또는 일부 주의로 이렇게 주셨는데 내용이 저희가 앞으로 시정요구 말씀 주신 대로 개선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다면 주의 및 제도개선을 그냥 제도개선으로 일괄해서 시정요구 유형을 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산업부 지적사항 중에 마지막 사업이 되겠는데요. 19페이지의 탄소중립대응사업재편기술개발 사업 관련해서 탄소중립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시정요구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산업부 관련 사업 말씀 올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그러면 다시 10페이지부터 의견 주셨던 위원님들의 의견 중심으로 의견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지호 위원님, 10페이지 제도개선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넘어갈까요?

**○차지호 위원** 저도 팬찮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소위원장 김소희** 11페이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 부분도 시정으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 이승렬**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 이승렬** 예.

○**소위원장 김소희** 괜찮습니까? 국제사업이 아마 상대국, 개도국 때문에 국내에서 핸들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좀 중요한 측면이니까 제도개선하셔 가지고 원래 소기의 목적을 좀 달성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 이승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13페이지 산업계순환경제기반구축 부분입니다.

○**박지혜 위원** 이견 없다고 하셔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수용하겠습니다, 그대로.

○**박지혜 위원** 1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예.

14페이지, 지금 특구 지정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 이승렬**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제가 확인한 바로는 특구 지정을 산업부가 하시나요 아니면 탄녹위에서 해야 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 이승렬** 실무는 산업부하고 고용노동부가 같이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이게 뒤쪽에 있는 정의로운전환 관련 고용노동부 사업하고도 연관이 된 부분이기도 한데……

○**박지혜 위원** 이 사업은 아까 주의든 제도개선이든 수용하겠다고 하셨고 저는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정의로운전환 특구 지정 관련한 지적은 여러 차례 있었고요. 이게 법이 마련된지도, 시행된지도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고시 마련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정의로운전환 사업이 기후대응기금 전반적으로 다 예산을 안 쓰고 있잖아요, 편성된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하셨으니까 주의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위원** 그런데 정의로운전환 센터 기금을 고시만 준비하고 집행을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지혜 위원** 고시도 준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김용태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 이승렬**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저희가 법 제정 이후에 그 하위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빨리 만들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랑 그 하위규정 입안 작업을 위한 세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발전소 폐쇄지역은 이미 돼 있는데 거기 특구 지정을 아직 못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 이승렬** 예,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 특구……

○**박지혜 위원**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한 업무를 촉진하자는

의미에서도 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이 정도면 주의가 맞는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떤가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 이승렬** 제가 올린 말씀은 15페이지 시정요구사항에 위원님들마다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유형을 주셔서 저희가 주의를 더 올려 주십사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기 말씀 주신 대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주의가 더 강력한 경고니까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박지혜 위원** 16페이지의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요 저희 예산소위에서도 지적을 해서 논의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주신 취지는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단순 냉난방기기 지원 사업 이게 1등급 기기를 지원하는 건데 사업 제목 자체는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저소득층 사업 명칭에 맞게 이 사업이 사실은 잘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하나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하시니까 수용이 되는데 이 단순 냉난방기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1등급으로 교체를 한 경우에 그러면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 이승렬** 예, 물론입니다. 효율이 낮은 데서 높은 기기로 바꿔 주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이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박지혜 위원** 같은 시간을 사용하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절대량 측면에서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런 걸 시뮬레이션했거나 사후적으로 사업 실적을 모니터링하려고 해 본 적이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 이승렬** 저희가 바꿔 준 다음에 실제 에어컨 가동시간까지 확인을 하지는 못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전력요금을 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에너지 사용 측면에서는 저희가 절약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한정된 재원이잖아요. 한정된 재원인데 실제로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는 기준, 여름에 겨울에 에어컨이라든지 난방시스템이 돼 있는 저소득층이 얼마나 있을까요? 반지하에 사는 분들 중에서 한번 조사해 봤나요? 저는 한정된 재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 효율성이라는 부분에서는 맞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 보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 이승렬** 제가 이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실장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특별히 여름에 폭염이 있을 때 에너지 취약층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

○**강득구 위원** 에너지 취약계층이 집에 다 에어컨 있고 난방기 있고 그러면 좋지요. 그러나 제가 통상적으로 아는 에너지 취약계층은 생각보다 훨씬 더 열악합니다. 그런 분들 한테 냉난방기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냉난방기가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에너지 효율 이것은 무지 낭만적인 생각입니다. 실제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정의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정책이 상당 부분 모순이라는 것 인지할 겁니다. 담당 국·과장 한번 불러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냉난방기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것까지 무작위로, 반지하 사는 분들 이런 분들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합니다. 낭만적인 생각입니다.

○차지호 위원 저도 얘기를……

○소위원장 김소희 적응 차원에서 차지호 위원님 말씀 주셔야 합니다.

○차지호 위원 강득구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 취약계층과 기후 적응 취약계층,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 적응에 가장 취약한 가구는 집에 에너지 효율이 낮은 냉난방기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 아니고 냉난방기가 없는 그룹이잖아요. 그리고 그 그룹들, 취약그룹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취약그룹에 대한 사업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는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냉난방기가 있는 그룹들에 대해서, 물론 이것도 가장 취약 계층에 냉난방기가 공급이 된다고 하면 그다음 차선은 에너지 비효율로 해서 냉난방기의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가장 취약한 그룹에 대한, 어떤 사업들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실태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은 사실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을 할 것은 냉난방기 교체나 냉난방기를 제공해 주는 게 기후 적응에 사실 필요한 일이긴 한데, 저는 2번 문구에서 기후 적응 및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는 사실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에어컨 없이 살아 보면 이게 어떤…… 저 한번 살아 봤습니다, 작년 여름에.

그래서 어쨌든 그 항목들에 대한 조정들이, 만약 행정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후대응기금을 쓰지 못하게 항목들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것은 법 개정 사항일 것 같고요. 그런데 강득구 위원님 말씀에 어쨌든 보태서 저도 똑같이 질의를 하면 기후 취약계층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루어진 상태에서 관련된 기후대응기금을 쓰는 논의들이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강득구 위원 저도 차지호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에너지 취약계층의 정확한 기준, 대상에 대한 입장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책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거냐 이런 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원칙과 기준이 부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기준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소위원장 김소희 이 사업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저도 사업은 살려 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건 진짜 적응 차원에서 필요하고 4·5등급짜리를 1등급으로 교체하는 것은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맞는데 위원님들 말씀은 실제로 정말 저소득층한테 가냐, 지원이 되냐 이 부분을 더 꼼꼼하게 봐 달라는 요청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쪽방촌에 저희가 제공을 하라고 해도 집주인과 사는 사람들이 달라 가지고 제공을 못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강득구 위원님은 정말 힘든 취약계층에 제공이 안 되고 오히려 그것보다 좀 나은 쪽에 제공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더 꼼꼼히 봐 달라는 그런 요청이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그냥 살려 뒀으면 좋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죽이자는 게 아니고요 사업 내용 중에 단순 냉난방기 기를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이 돈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앞에 자료가 없어서, 아마 담당하시는 분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40% 정도가 저소득층에 제공이 되고요 60%는 세 자녀 이상 가구, 이런 출산가구, 특수한 보통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400만 원짜리 에어컨을 먼저 사면 30만 원 환급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이라는 보통의 생각이 맞지 않는 그런 항목에 예산의 한 60%가 쓰이고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게 되지 않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하라는 것이고 그걸 하고 싶으면 다른 돈을 이용해서 하라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그러면 문구를 수정하는 걸로 해서 할까요?

○박지혜 위원 예. 단순 냉난방기 지원 사업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사업 내용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런……

○소위원장 김소희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저소득층 지원보다는 일반 복지 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금을 이관하라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할 경우는 굳이 이 기금을 이관할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맞지요, 실장님?

○박지혜 위원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도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400만 원짜리 에어컨을 사고 환급받으실 수 있는 그런 계층을 지금 에너지 복지 수혜계층으로 우리가 최우선으로 취급해야 될 계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 이승렬 아까 제대로 실태조사도 확인하고 추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 주신 다른 기금으로 이관하여 별도로 사업을 해라, 이 부분이 결국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 이관을 하고 이런 것은 사실 재정 당국하고 저희가 전반적인 상의를 드려 볼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타부타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런데 비슷한 취지의 지적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재위에서도, 이게 기재부에서도 담당을 하니까 유사한 지적이 한 번 있었고 그때도 저희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철회를 한 번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같이 맞춰서 보건대 다른 데로 이관해서 하라는 말씀은 여기에서는 일단 철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한 것들은 꼼꼼히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제도개선조차도 지금 시정요구 받기 어렵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 이승렬 예, 여기서 철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타 기금으로 이관하라는 것만 삭제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차지호 위원 저도 '단순'이라는 단어가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 아닌 그룹' 혹은 '취약가구가 아닌'이라는 형태가 훨씬 조금 더 정교한 단어이지 않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 이승렬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시정요구사항 중에 단순 냉난방 이관하라는 거를 빼고 그 앞부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에서 저소득층에 단열·창호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우선으로 하여 수행해라'라든지 그런 식의 요구를 주시는 걸로 이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지혜 위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나 방금 말씀하신 기후위기에 있어서 특별히 취급되어야 될 그런 계층들을 초점으로 해서 에너지 효율 우선으로 해서 하시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 이승렬** 예, 감사합니다.

기금 이관 부분은 빼 주시고 그렇게 하면 저희 예산 당국도 이해를 그렇게 하실 걸로 이해가 됩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저소득층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계획을 다시 철저히 짜 주시면 저희가 다음번에 할 때 더 유심히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철회를 해 드렸으니까 그것 명심하시고 사업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 이승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17페이지 보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철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제도개선은 남긴다는 건가요? 제도개선의 멘트 내용을 그렇게 바꿔서 나간다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김소희** 멘트를 수정해서 저소득층에만 집중하겠다라고 해 주시면 철회를 요청드리는 것 같고요, 정부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도개선은 남겨야겠다라고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박지혜 위원** 저는 제도개선을 남겨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소영 위원님 의견도 사실은 아직 들어 보지는 않아 가지고요.

○**차지호 위원** 제도개선을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이 제도개선을 한다는 얘기인데 왜 안 한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소희** 제도 어차피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제도개선으로 그냥 가시지요.

○**차지호 위원** 철회를 왜 한다는 거지요, 문구 수정해서 한다는 게 제도개선인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소희** 이 사업을 없애자는 건 아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 이승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감사합니다, 실장님.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의견 주신 위원님들?

○**박정현 위원** 왜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 이승렬** 사업 재편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예, 그 지침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 이승렬**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사업을 조금만 말씀을 올리면 사업 재편이라는 게 사실 탄소중립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급 과잉, 신산업 진출, 위기지역 대응 그리고 탄소중립, 디지털, 공급망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분야는 저희 산업부에서 사업 재편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겁

니다.

그래서 이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사업이 어떻게 보면 기후대응을 전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관련이 깊은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대응에만 쓸 수는 없는 내용인지라 이런 지적이 있으신 걸로 이해합니다.

○박정현 위원 기후대응기금인데 지금 기후대응기금이 안 그래도 적어서 더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운데 기후대응기금을 기후와 무관한 사업에 지원한다는 게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 이승렬 방금 말씀 올린 것처럼 이 사업은 사실 기후대응기금이 있기 전부터 해 오던 사업이었고요. 기후대응기금을 만들면서 연혁적으로 이게 관련이 있다고 해서 기후대응기금의 사업으로 편입이 된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다시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 이승렬 이렇게 기금 내외에 옮기는 문제는 이것도 사실 저희 산업부에서 결정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관계 부처랑 예산 당국이랑 좀 상의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차지호 위원 저도 이해가 가지 않았네요.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자는 않았었는데 탄소중립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너무나 명확한데 왜 기금의 용도와 상관없이 쓰면서 그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소희 실장님 대답을 잘 못 하고 계시네요.

○차지호 위원 이건 감사 사항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예결 사항을 넘어서 기금의 목적과 전혀 다른 상태로 쓰이고 있는데 그것을 시정할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소위원장 김소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수용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게 탄소중립 유형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부터 시작된 사업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탄소중립 유형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현재는 한 300개 사업 중에 200건 이상들은 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들인 것 같고. 초반과는 좀 다르게 유형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사업들은 다 없어지고 있는 거고 현재는 탄소중립 유형에 맞는 사업들 위주로 채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 이승렬 만약에 말씀……

○강득구 위원 잠깐만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 산자부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정권이 지향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장께서는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기금 설치 이전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관행적으로 넣은 거다’ 이런 것을 그냥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존 사업들이 지금 다수 사업에 포함돼 있다. 이게 계속 가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다 기금의 용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기후대응기금의 성격에 맞지 않아. 그런데 기금 만들기 전에 관행적으로 해서 여기 기금에 포함시켰어. 그런데 계속 가야 돼’,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기금 성격에 맞게 용도에 맞게 이 부분을 다시 조정해야 되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연혁적으로 이렇게 생겼지만 저희가 살펴보니 그 사업성이 기후대응과 안 맞는 것은 계속 타 기관으로 보내고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계속해 오고 있고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맞게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부분들 중요하지요. 또 동시에 좀 더 과감하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이재명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확고합니다. 저는 기재부차관이나 실장께서 적어도 그런 국정기조에 맞춰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국정 방향 속에서 관료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 그러나 적어도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기후위기 관련된 부분은 아주 중요한 국정과제 어젠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인식과 정책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지 않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동의합니다.

○**강득구 위원** 동의하지요? 그러면 그렇게 맞게 기후대응기금도 좀 방향을 선회하고 그리고 또 정책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래서 앞 부분의 총괄에서 제가 그 부분을 수용했습니다, 그런 입장을. 그런데 개별 사업별로 보는 것은 또 다른 현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강득구 위원** 산자부 실장, 좀 무겁게 생각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 이승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사업을 이제 이해를 했어요. 원래 있던 사업들 중에 일부가 기후대응기금으로 넘어왔는데 애초에 그렇게 설계된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계속 탄소중립과 관련 없는 사업들은 뺀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완전히 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몇 년 동안 이걸 유지하겠다 이런 것은 지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시한을 정해 놓고 정확하게 다 빼시고 새로운 사업을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강득구 위원** 기재부차관님, 기후대응기금 원칙과 기준 이런 게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산자부 실장이 하신 말씀 제 입장에서 해석하면 어쨌거나 그전에 각 부처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여기다 넣어서 일종의 사업 나눠 먹기식으로 했다 이것을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기재부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사업 재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 포함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 하신 말씀의 하나의 중심 과제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사업 부처가 따로 있어서 사업 부처랑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위원님들, 여기 시정요구사항이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지금 여당 위원님들께서 더 세게 말씀 주셔서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실장님한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할까요, 제도개선 할까요?

○**박정현 위원** 주의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도개선으로 냈는데요 주의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차지호 위원님.

○**차지호 위원** 주의든 제도개선이든 지금 필요한 것은 원칙상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제도개선 계획을 저희가 좀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있던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행정상의 이유를 얘기하시는데 아까 제가 놀랐던 부분이 제도개선 이것도 안 받겠다면 이걸 바꾸려는 의지 자체가 굉장히 빈약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맞게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지금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정리를 할지.

그리고 새로운 기금 용처를 발굴한다고 하는데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기후 적응 같은 경우는 써야 될 만한 막대한 분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으로 소중한 기후대응기금이 기후와 상관 없는 일로 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실장님, 주의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강력하게 바뀔 거라고 말씀 주시는데……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 이승렬**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히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취지에 잘 맞춰서 하겠다는 취지로 인정을 해 주시면,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좀 더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다른 사업도 비슷한 게 있었지만 기재위에서 비슷한 내용의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도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린, 하여튼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시정요구 유형을 해 주셨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당국이랑 같이 논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차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바로 내는 걸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감사합니다.

기후기금 예산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본 게 아마 이번이 처음이지요? 그래서 아마도 각 부처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볼 예정이니까 지금부터라도 더 꼼꼼하게 봐 주시면, 저희가 지금 제도개선 수준으로만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꼼꼼하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 이승렬** 예,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한마디만 더 하면요 기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런 위상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재부차관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금 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오늘 위원님들 다 같은 말씀 하셨는데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정부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득구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19페이지는 제도개선 수용하겠다고 말씀 주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 이승렬**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지금 박지혜 위원님께서 자리에 없어서, 일단 수용하겠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20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1건인데요.

그린창업 생태계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고 사업의 효과성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시정요구사항으로 온실가스 감축과의 연관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유지하고 재설계를 면밀히 검토하며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감축비용 정보 명시 및 성과지표를 보강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중소벤처기업부의 누가 나오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 권순재** 지역혁신정책관입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소속 말씀 주시고 성함 말씀 주시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 권순재**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관 권순재입니다.

제도개선하고요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지 변경 등 사업 자연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현재 매월 추진 실적 점검이라든지 현장 확인 등을 통해서 신속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이 부분은 아마 부처에서 내용 확인 다 끝났고 일반회계로 사업 이관도 2025년부터 되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 권순재**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고 환경부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다음, 21쪽부터 환경부 소관 집행 사업들입니다. 39쪽까지 해당되고 가장 많은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의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중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입찰계약 과정에서 지원업체들의 부적정 집행 사례가 적발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22쪽, 그다음 지적사항으로 탄소중립설비 지원 사업은 개발 감축설비의 감축 효율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민간부문에서는 9개 업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7개의 지방자치단체 13개 공공시설에서 감축량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셨고요. 그리고 탄소 다배출 업종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기술 상용화에 대한 지원 없이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3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집행 관리를 통하여 부적정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감축설비 단위의 성과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감축 효율이 부진한 지원업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

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셋째, 탄소 다배출 업종에 대한 설비 투자 및 기술 상용화 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24쪽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입니다.

지적사항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99개 기업 중 15.2%인 15개소가 미가동되고 있는 상태라는 지적과 함께 사전 선정, 사후관리 정합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성과와 연동하여 보조금의 환수·감액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유지보수 펀드 또는 공동AS 체계를 마련하며 사전 적격성 평가 강화를 포함한 사후관리 고도화 지침을 개정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25쪽,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사업 수행기관의 실집행률이 32.6%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26쪽에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으로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수행기관이 신규 사업을 효율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간 협력 여건 조성, 사업 유치국의 역량 배양 등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27쪽,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에 대해서 25년부터 30년까지 2076t의 온실가스 누적 감축량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산정을 했지만 이 산정의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하단에 보시면 건축물 유형·규모·용도별 대표성을 반영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산정기준을 보완하며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해 산출근거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감축량 산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28쪽,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인데요 내역사업인 물에너지 종합 홍보관 사업입니다.

홍보관이 준공되지 않았음에도 관리위탁비를 편성하여 예산이 불용된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준공 이전 운영비 편성을 자체하고 선투입·재발주 시 국고 부담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며 월별 공정관리 지연 시 경고 및 대체발주 자동화 기능을 도입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29쪽,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선별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영농폐기물 재활용촉진 사업과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집행 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은 설계·인허가 지연 및 물가변동 대응에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세 번째, 일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은 24년 이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사업 확대 필요성이 있으므로 예산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한 하단에 보시면 동 사업 재설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30쪽, 시정요구사항으로 첫째, 다회용기 보급, 일회용컵 보증금제 등 일회용컵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둘째,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은 선정 시 사전 타당성 체크리스트를 강화하고 공정 지연 시 단계별 감액·대체사업 전환 규정을 명문화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셋째, 재활용촉진 사업과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은 지자체와의 사업 진행과정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고 사전 절차를 철저히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넷째,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선별 인프라 확충 사업은 기금 용도에 부합한지 검토해서 재설계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31쪽, 습지보전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습지보호지역 훼손지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 사업은 실집행률이 20~60%로 저조하고 매년 불용 및 이월이 발생하는 등 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단에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반복된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방식의 변경과 함께 철저한 계획과 집행관리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32쪽,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입니다.

펀드 금액의 30% 이상이 탄소중립과 무관한 분야 기업에 투자되었으며 에너지·탄소 분야는 4.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투자 방침을 변경하여 운영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33쪽,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은 세수 부족으로 당초 예산 95억 원에서 81억 원으로 감액 수정되었고 실집행률은 또 88%에 그쳐서 지역별로 사업 집행 격차가 발생한 문제도 아울러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지자체의 역량과 조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실태조사 등 이행점검 강화, 신규사업 발굴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34쪽,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 사업은 21년부터 23년까지 실집행률이 50% 수준에 불과하고 24년은 교부액 대비 89.8% 집행률, 9억 7000만 원이 불용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35쪽에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인력파견 및 기술 지원, 교육·홍보 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36쪽, 친환경 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탄소중립포인트제도입니다. 전국적인 평균 참여율이 저조하고 지자체 간 참여율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녹색생활 실천 분야는 2024년 11월에 예산 부족으로 지급이 미뤄진 바 있고 올해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4개월 빠른 7월에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는 지적입니다.

37쪽에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지자체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요. 탄소중립포인트제도의 사업 예산을 확대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38쪽, 친환경경제사회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녹색경영 촉진 사업입니다. 지정기업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대기업과 제조업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쯤에 보시면 환경법령 위반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총 50개 녹색기업이 환경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다음 39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사업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여기까지 환경부 관련 사항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안세창 실장 나오셨지요?

의견 주십시오.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 안세창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들 대부분 수용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된 세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원업체들에 대한 부적정 집행 사례와 또 감축설비의 성과 관리, 탄소 다배출 업종에 대한 지원 강화에 대해서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제도개선이라서 수용하고요. 첫 번째 건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함께 있어서 시정요구 유형을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에 국조실에서 부적정 집행 사례가 적발됐을 때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작년 11월까지 정부 합동점검에 따른 필요한 조치들을 모두 완료했고 올해부터는 그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점을 고려해서 개선으로 통일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성과와 연동한 보조금 환수·감액을 추진하라는 취지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최근 사후관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수자원공사와 매립지공사가 처음 사업을 하면서 사업 첫해에 대상 국가와 협의 과정이 좀 지연돼서 실집행률이 저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정부 간 사전 협의를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실집행률을 높이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개선 취지들을 반영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수열에너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열에너지와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 산정하는 부분을 좀 조정해 달라는 부분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1차로 수열에너지 보급 사업을 한 5개소가 25년 말까지 준공될 예정입니

다. 이 준공된 시설에 대해서 절감량을 분석해서 온실가스 감축 산정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와 제도개선을 요구하셨는데 제도개선으로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물에너지 종합 홍보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작년 7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계약 당사자가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25년 9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11월부터 개관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조치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주의로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9페이지 재활용 선별 시설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요청하셨는데 모두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예산 검토 과정에서 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시급성, 부지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해서 이·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기후대응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재정 당국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습지보호지역 훼손지복원과 관련된 집행 부진입니다. 이 부분은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현재 신규 사업의 경우는 행정절차와 사유지 매입이 완료된 지역만 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의 탄소중립 관련 투자 비중이 적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현행 기후대응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주목적 투자 비율을 70% 이상 하도록 하는 관리 기준을 더 강화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취약계층에 관련된 사업의 집행률 제고 부분입니다. 제도개선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지적사항 중에 취약계층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강화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서울, 부산, 강원에 대해서 시범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국 단위로 확대해서 지역 맞춤형 신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과 관련하여 탄소중립 지원센터 예산 집행이 저조하다는 부분입니다.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집행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서 탄소중립 지원센터 실집행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원센터에 대한 역량,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탄소포인트제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참여율이 편차가 있다는 부분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지자체와의 협의 또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 녹색기업지정제도와 관련해서 실질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사후관리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첫 페이지부터 보실까요?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주의하고 제도개선 2개의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박지혜 위원님이 주의를 주셨고 나머지 분들은 제도개선, 제도개선으로 수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지혜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박지혜 위원** 지금 페이지를 넘기고 있어 가지고……

○**소위원장 김소희**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부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23페이지입니다.

○**박지혜 위원**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일단 부처에서 시정을 완료했다고 해서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한 가지만 좀……

○**소위원장 김소희** 예, 말씀 주시지요.

○**강득구 위원** 49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하는데 총 몇 건 중에서 이 정도가 나온 거지요?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이게 같은 사업장에 대해서 업무방해, 입찰방해, 관계 법령 위반 이런 것들 건수를 다 합친 겁니다. 전체적인 대상 숫자는……

○**강득구 위원** 같은 업장에서 그랬다는 겁니까?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예, 같은 업체에 대해서……

○**강득구 위원** 같은 업체……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부적정 사례 숫자를 전부 다 합쳐서 계산한 겁니다.

○**강득구 위원** 한 업체가 496건이라는 얘기입니까?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아닙니다.

○**강득구 위원** 아니지요?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예, 아닙니다.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개별 업체가 이렇게 부적정하게 한 부분도 있지만요 사실은 의도를 갖고 한 데도 있었고 이 내용을 잘 몰라서 한 업체도 있었을 겁니다. 혹시 사전 컨설팅 제도나 아니면 매뉴얼 이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사전에 홍보 내지는 사전 컨설팅 이런 제도가 있나요?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저희가 이 사업이 시작된 지 한 4년째 되는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그런 컨설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환경부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극대화하는 부분에 너무 신경 쓰면서 이런 집행 관리가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게 지적된 이후에 관련된 제도, 규정을 바꾸고 또 설명회 하는 단

계에서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환경부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들이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고 무수히 많은 관련된 일들이 벌어지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해마다 1건 아니면 몇 년에 1건 이런 업체들도 다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수요자적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 496건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저는 주의,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것 아닌가요?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환경공단이 지원 부서입니다. 공단을 통해서 이 기업들한테 진행 과정들도 제대로 잘 컨설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한번 내부 평가를 통해서 왜 이 정도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리고 예를 들면 496건 중에서 한 100건의 회사를 상대로 무엇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요새는 의도를 갖고 한 기업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내용을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사전 컨설팅 포함해서 좀 더 수요자 입장에서 고민과 그 고민을 기반으로 한 제도 설계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다음,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차지호 위원님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 수용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부분입니다. 이게 주의하고 개선이 2개 나왔지요. 일단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에 환경부가 집행하는 기관은 세 곳인가요? 환경공단, 수자원공사, 매립지공사.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으로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수자원공사나 매립지공사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작년부터 이 기관들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제감축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의 신뢰라든지 여러 가지로 중요하다 보니까 좀 집행률이 낮은 것 같은데……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예, 맞습니다.

○**김용태 위원** 환경공단은 한 지가 대략 얼마 정도 됐을까요?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이 사업 자체가 21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환경공단은 그 초기에 그런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김용태 위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런 감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하고의 어떤 신뢰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또 인증도 중요하고. 그런데 예산을 굳이 이렇게 막 여러 기관으로 쪼갤 필요가 있나요? 그냥 환경공단이 잘하고 있으면 환경공단에서 같이 통합해서 집행할 수 없는 건가요?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와 매립지공사가 가진 전문성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주게 됐습니다. 수원국의 매립지와 관련된 사업이다 그러면 매립지관리공사가 가는 것이 수원국 입장에서도 좀 더 전문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고려해서 신규로 지정을 했는데 아직 준비 상

태가 부족해서 실집행률이 낮다는 부분을 설명 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다만 지금 국제감축은 목표로 잡은 양이 굉장히 많은데 전반적으로 다 실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이 국제감축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 사실 이것을 감안해서 다음 NDC 수립에도 반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봐 주십사 하는 생각이었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제도개선으로 의견 주신 부분을 수용해서 그러면 저도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저도 한 가지, 박지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의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라는 점이 시사하는 점은 실집행률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국내 감축이 아닌 국외 감축을 통해서 2030 NDC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지금 2030 NDC에는 3750만t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만 저희는 항상 보충적 수단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감축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모자란 부분을……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보충적 수단이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예.

○**강득구 위원** 보충적 수단이어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윤석열 정권의 기조는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렇게 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예.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보충적 수단이지 이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

저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권 3년은, 어쨌거나 관료 입장에서는 그 정권에 충실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큰 틀에서의 국정 기조 그리고 또 정책의 방향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맞게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의 우리가 시사하는 바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좀 고민해 달라 이게 제 주문입니다.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예, 알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 국제감축 사업을 단순히 온실가스 국제 감축량을 확보한다는 게 아니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ODA 차원에서 접근하고 부수적으로 이런 감축량을 획득한다는 것으로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이 사업이 탄녹위에서도 지지부진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11.3%에 해당되는 양을 갖고 있어서 지금은 시작한 지 일이 년 차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3년 차, 4년 차에도 안 되면 제도개선 수준이 아니라 주의 수준으로 올려야 되는, 그렇게 명심하고 이 일을 좀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산업부와의 형평성 차원에

서 같이 제도개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는 저는 주의를 줬고 이소영 위원께서는 제도개선을 주셨는데 저는 이 수열에너지 개선 관련해서 MRV를 환경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부처인데 이 부분을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못 한 것 대해서 매우 안타까움을 느껴서 저는 그냥 주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의견 주십시오.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사실 저희가 수열에너지 관련된 감축량을 계산하는 그런 국제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되는 시설을 토대로 계산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 저희가 최근에 초등학교, 스마트팜 그다음에 무역협회 등에 그런 수열에너지 시범 설치를 한 게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가지고 실제 운영하는 단계에서 그런 절감량 같은 것들을 분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25년 말이 되면 5개의 시설이 준공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내년 초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산정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에는 제도개선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예, 제도개선 받겠습니다.

그리고 차지호 위원님이 아마 시정요구사항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을, 이번 건 중에서 시정을 주신 건이 있습니다. 홍보관 관리 관련해서 주의를 요청하셨는데 차지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차지호 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적으로 보면 검토를 해 봤을 때 예산이 불용되고 그 불용된 게 잘 납득이 가지 않잖아요. 준공 전에 이것을 신청해서 불용을 했다는데 이것은 좀 강하게 얘기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실래요?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저희가 사실 물에너지 종합 홍보관 사업에 홍보관 건설비하고 그다음에 관련 홍보 예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 앞에 건설과 관련돼서는 건설사가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약간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사업주한테 대금을 다 지불하지 않고 수공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우선 수공이 이 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다음 달에는 준공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차지호 위원** 그러면 준공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썼다라기보다 준공이 늦어져서 먼저 이게……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준공 과정에서 그 업체가 약간의 자금난으로 사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 됐었고 그래서 저희는 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공사는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공에서 자체적으로 선투입해서 공사는 하고 그 비용을 반환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 돈이 아마 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시공업체가 돈을 받고 공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 시공업체 선정에 문제는 없었나요?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계약 당시에는 그런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

었던 것 같습니다.

○**차지호 위원** 그러면 시정은 저희가 조금 약화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그러면 주의로 받겠습니다.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그리고 저는 위원님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종합 홍보관이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안 맞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저는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했으면 그다음 번에는 이 대응기금에서 이 부분은 좀 안 나갔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아마 기재부에서 기금 관리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나 원칙을 좀 세워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 체험관들은 엄청 많은데 저는 그게 실제로 감축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기재부가 가이드라인을 세우는데 저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박정현 위원**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리스트를 조금 뽑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일괄적으로,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체험관 중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서 그것을 갖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지호 위원** 저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해요. 이렇게 사업 목록들을 보면 사실 기금이 형성되고 억지로 찾은 느낌이 들어요.

○**소위원장 김소희** 기금 쓰려고.

○**차지호 위원** 기준에 있는 것들이랑 억지로 매칭을 시키거나 그리고 그게 우리가 쓸 예산이 충분히 있고 탄소중립이나 기후 적응 문제에 대해서 시급성들이나 이런 문제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사실 그 내용을 저 혼자서 채워도 기후 적응으로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안 쓰고 있는, 이것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가 될 만한 사업들이……

그리고 이것을 굳이 찾아보기 힘든 게 아니고 해외에서 기후 적응 관련된 사업 예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전문성의 부족인지 그 기금 용도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지 않고 우선순위가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들의 삶과 죽음의 문제와 조금 많이 동떨어진 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사용된다는 것을 보고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사업들이 안에 들어와 있을까 그리고 아까 그 참기름 사업도 그렇고 참……

이것은 저도 종합 정리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선별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을 다 수용하겠다고 말씀 주셨고 위원님들 의견 추가로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박지혜 위원** 그러니까 기후대응기금의 사용과 관련한 원칙을 세우는 과정이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사실 이런 류의 사업이 폐기물 관리 사업인 것 같거든요. 생활 폐기물, 영농형 폐기물,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출하는 폐기물을 치우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다 기후대응기금으로 할 수도 없고 사실 원래 상하수도 폐기물, 위생 이런 환경부의 고유 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은 그쪽 비용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과의 연관성 및 시급성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것이기는 합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실장님 의견 주십시오. 저도 일단 비슷한 의견이 좀 있기는 합니다.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환경부도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제도개선을 수용하는 입장이고 기재부하고 그런 방향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어쨌든 예산심의 원칙을 세울 때 앞서 말씀드렸던 인프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폐기물 관련된 그 부분은 감축 기여도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시고 환경부 고유의 폐기물이라는 항목이 크게 있으니까 그것 차원에서 하실 수 있는 방안이면 그쪽 기금을 활용하시는 방안으로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습지보전관리는 주의를 그대로 받겠다고 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소흡수원 관련해서 지금 이 습지보호구역에는 그래도 시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계획에 맞춰서 탄소흡수량이 얼마인지에 대한 계획도 다 환경부가 갖고 계신 거지요?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춰서 습지보호구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 것도 같이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 건 제도개선 의견 받겠다고 했고요.

박지혜 위원님, 추가 의견 있으실까요?

○**박지혜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그러면 다음 번,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관련해서 제도개선 수용하겠다고 했고.

박정현 위원님, 추가 의견 있으실까요?

○**박정현 위원** 예. 이것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투자 매뉴얼이 있을 것 같은데 매뉴얼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다음 번,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관련해서 제도개선 수용하겠다고 말씀 주셨고요.

강득구 위원님, 의견 있으실까요?

○**강득구 위원** 기재부차관님, 기후대응기금의 지출사업 관련해서 연관성·효과성 이런 부분 갖고 한번 평가해 본 적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 아마 부대의견에서도 나오는데 성과평가에 대해서 한번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제가 알기에는 22년부터 운영기금이 작동했지요. 한 3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좀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기재부에서 큰 틀의 방향을 잡고요, 환경부랑 협의하고……

사실 저도 지난번 환경부장관 청문회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기금 관련해서 관리를 기재부에서 하는 게 맞는지, 예를 들면 이제 기후에너지부가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넘

기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했는데 전반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혹시 말씀 기회를 주시면 성과평가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예산·재정 사업은 종합적으로 성과평가 체계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체계를 갖고 새로운 그걸 하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그것은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관련된 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기후대응기금에서 성과평가를 별도로 하자는 그 근거가 만들어지면 저희들은 그것에 따라 좀 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제가 오늘 특위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연관성이나 효과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도 취지는 동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득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나름대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관리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일회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종이빨대 사업을 하시는 한 몇몇 분 사업자들이랑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환경부에서 그분들이랑 같이 간담회를 한 적 있었나요?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예, 저희가 작년 문제가 제기된 때부터 간담회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21년도에 플라스틱 부분 관련해서 규제 발표가 나고 이하면서 이분들이 플라스틱빨대가 폐기되고 종이빨대로 정책이 바뀐다고 하면서 설비를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예.

○**강득구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플라스틱 규제 정책을 유보한다, 유예한다 이면서 이분들이 완전히 다 준비하고 사업을 시작하던 중에 어떻게 보면 사업이 쭈그러들고 거의 지금 망하고, 그래 갖고 30개 업체 중에서 한 60%, 70% 정도는 대출 10억, 20억 받고 망하고 이제 한 3분의 1 정도만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비슷하게, 31개소가 있었는데……

○**강득구 위원**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정의로운전환 얘기하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큰 틀의 국가정책이 바뀌면 그 정책에 따라서 일자리도 바뀌게 되고, 예를 들면 사라지는 일자리도 생기고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고 또 새로운 업종도 생기고 사라지는 업종도 생기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은 정책의 중요한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예, 관련 생태계도 잘 유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득구 위원**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소위원장 김소희**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 예, 이 부분만 결론 내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환노위 상임위에서 추가로 논의하시면 어떨까요?

○**강득구 위원** 아니요, 이것은 저는 기재부가 있으니까……

기재부차관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사업 자체가 사양산업을 넘어서 끝나게 되고 망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가폭력이라는 표현은 다소 과도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은 같이 공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종합적으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입장은 정하기가……

○**강득구 위원** 아니, 제 말의 결론은 이겁니다.

정책이 바뀌고 그래서 그 바뀐 정책을 준비해서 사업을 하던 분들이 있는데 정책이 유예돼 갖고 설비 포함해서 완전히 그냥 스톱이 되고 예를 들면 못 쓰게 돼 갖고 사업 자체를 그만둘 수밖에 없어,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포함해서 정부 부처에서 다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환경부, 제가 좀 부탁을 드리면 이분들에 대해서 같이 협의, 간담회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민하고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이빨대 업계에 대해서 지원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업계 소통도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4회 정도 간담회를 하면서 업계의 요구사항을 파악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금융지원이나 판로 개척 같은 것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더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다음,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은 제도개선을 받겠다고 수용하셨고요.

그다음으로 친환경 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제도개선 수용하셨고.

강득구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추가로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박지혜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없으면 수용으로 넘어가고.

친환경경제사회기반구축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수용하셨는데 의견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실까요?

○**박지혜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실장님, 이것 지정된 기업 숫자가 계속 줄고 있지요? 이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가 되나요?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어떤 걸 말씀……

○**소위원장 김소희** 녹색경영 촉진 관련 사업 해서 대기업하고 지정 기업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딱히 인센티브도 없어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 이유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지정받은 기업들이 차별성이 있나요? 온실가스 감축에 대단히 기여를 하고 있는지 사업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여쭙니다.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지금 녹색기업 지정 제도 자체는 과거에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을 때였기 때문에 탄소중립사회 구현으로 가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오히려 잘한 기업에 채권이라든지 지원해 가지고, 그런 데 찾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그렇게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그냥 계속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그러면 이제 환경부 것은 마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예.

○소위원장 김소희 그러면 수석께서 고용노동부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다음, 고용노동부 관련 사항입니다.

40쪽,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하단의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사업을 활성화하고 현장 상황과 수요를 면밀히 조사하며 사업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해서 또한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관리하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41쪽의 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 사업입니다.

역시 집행률이 24년 41.2%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당초 예산액의 28% 수준을 감액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부족으로 집행액이 41.2%에 불과했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2년과 23년에도 불용액 발생, 집행률 저조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 사업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닌가, 개선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음 42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집행 부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내용 개선 등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성과를 점검·관리하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여기까지 고용노동부 관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고용노동부 누가 나오셨을까요?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 노동시장정책관 참석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하고 고용환경개선지원금에 대해서 2건 모두 제도개선 요청을 해 주셨는데요. 2건 모두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40쪽 일자리전환지원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환을 대비하는 사업체에서 직무 전환이나 직무 배치와 관련된 훈련이나 이·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실비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훈련 수요 발굴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지적해 주신 사항들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산업·일자리전환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컨설팅이 컨설팅으로 그치지 않고 훈련 수요로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서 수요 발굴에 조금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고용환경개선지원금 관련해서는 이 내용은 주로 교육훈련시설 임차라든지 기숙사 임차, 통근버스 임차, 그러한 내용들 관련 사업인데 22년 결산 관련해서 기재위나 예결위 등등에서 이게 기후대응기금 취지하고 조금 맞지 않다는 말씀들을 주셨던 사업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 잔여 사업비만 지금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사회 통폐합 차원에서 개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용태 위원** 정책관님, 저는 의견이라기보다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에 따른 공정한 고용 전환 관련 기후대응기금 활용계획을 담당자 통해서 저희 의원실로 따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기후대응기금에서 빠져나간……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 사업 자체가 종료되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사업 자체를 종료시킨다고요?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훈련시설을 임차하거나 아니면 기숙사 임차, 통근버스 임차 같은 지원 내용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통근버스라든지 기숙사 임차로 이 사업이 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22년 결산 관련해서 기재위 차원 또 예결위 차원에서도 기후대응기금 취지에 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런 말씀들을 주셔서 올해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잔여 사업비만을 편성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게 산업 전환이랑 일자리 전환, 그러니까 탄소중립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새롭게 그러한 수요가 있는 기업들을 지원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 기업 자체는 저희들이 대상이 어떤 거냐 하면 기업 활력 촉진법에 따라서 산업부에서 승인되어 있는 사업 재편 기업이랑 그다음에 사업 전환 촉진법에 따라 가지고 중기부에서 사업 전환 기업으로 승인받은 기업 등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는 있었는데요. 실질적인 대상 기업의 적정성보다는 지원 내용이 기숙사를 임차하는 비용이나 통근버스 임차 비용이 기후대응기금 취지에는 조금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었던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대상 기업의 적절성이 사실은 더 중요한 요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그런 의견을 주셨다고 하니까 그건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어쨌든 사업 재편이나 사업 전환 기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기업들에 지원이 불필요한 건 아니고 지금 지원의 방식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려면 이걸 어떻게 할 건지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고 실효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고민을 하신 건가요?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래서 그간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분의 사업 내용은 종료를 하고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이 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이 중점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드물게 협력업체나 그런 쪽에서 인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전환과 관련된 역량을 갖고 있는 인력채용의 수요도 하나 있고 또 부득불 전환 과정에서 협력업체라든지 일자리를 잃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력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업체에 채용이 되거나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채용 장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 목소리도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인력들에 대한 채용 장려금 사업을 재정 당국과 신설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 내용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이게 애초에 만들어진 이유가 석탄발전 폐지지역이 그다음 대체 산업으로 갈 때 그 인력들을 잘 훈련시켜서 대체 산업으로 넘어가게끔 하는 것 그리고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넘어갈 때 그 인력들이 넘어가게 하는 것 그 두 가지가 메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그냥 산업 전환에 따른 디지털 전환까지 다 엮이다 보니까 지금 약간 애매모호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석탄발전 폐지지역 특별법도 곧 산업부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킬 예정인데 그 법안이랑 같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석탄발전 폐지지역에 대한 일자리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지점을 더 집중적으로 고민하시는 게 이 기후대응기금이랑 가장 연관되게 쓰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원금은 약간 집중과 선택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리고 아마 이것 외에는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인가요, 그거 운영하는 비용 정도가 정의로운전환을 위해서 지출하고 있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 아닌가요?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 산업·일자리전환 지원센터하고 산업·일자리전환 분석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일자리전환 지원센터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각 해당 사업체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을 받은 기업들이 앞서 말씀드린 교육훈련이라든지 그러한 수요로 같이 연결되는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산업·일자리전환 지원센터는 올해 같은 경우 충남 태안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추진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충남경제진흥원을 산업·일자리전환 지원센터로 같이 지정을 해 가지고 올해 태안 화력발전소 관련된 해당 지역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래서 사실 오늘 지적한 대로 앞으로 예산 내용, 사업 내용도 대상 기

업들 그리고 대상 산업을 적절히 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예산 규모가 사실은 지금까지 굉장히 작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부도 그렇고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점들을, 규모를 좀 키우는 문제를 진지하게, 기재부도 이 부분은 좀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다음, 국토교통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2건입니다.

첫 번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당초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나리오에 따르면 28년까지 지원 물량이 의무화 물량보다 더 많도록 추산을 했지만 25년 예산에서는 27년부터 의무화 물량이 지원 물량의 4배 그리고 30년에는 90배에 달하며 과도한 물량을 의무화 대상으로 무책임하게 떠넘기고 있다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24년에는 도서관, 기타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 파출소, 교육원, 기타교육연구시설에 대해 지원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실제 집행 내역은 보건소, 의료시설, 어린이집, 경로당에 대해서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가 본격 추진되기 전까지 이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나리오에 따라 지원하는 용도 건물의 유형을 확대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다음 44쪽, 석유코크스 활용 수소생산 실용화 기술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첫째, 석탄가스화기술로 수소를 생산하는 것과 유사한 화석연료기술 R&D라는 점, 둘째 석유코크스 100만t을 투입한 수소 생산량은 15만t에 불과해 사업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그래서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이관하고 26년도 예산을 감액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국토부 누가 나오셨지요?

○**국토교통부정책기획관 이상일** 국토부 정책기획관 이상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 등, 이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뿐만 아니라 재정 당국도 여기에 대한 증액,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국토부의 노력이 저조하다고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예산 증액이라든지 여기에는 과감하게 폭을 넓히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올해 예산이 1100억이라면 내년에는 2000억 수준으로 두 배 정도 일단 올렸고요. 정부의 의지를 담아서 예산 당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관련된 사항으로 사실은 예산이 덜 확보되다 보니까 특정 유형만 지원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증액이 과감하게 될 경우에는 그 유형을 보다 확대해 가지고 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안입니다. 석유코크스 활용 수소생산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 이것을 타 회계·기금으로 이관 및 감액 필요, 이 취지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간에 사정이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그 변경된 부분에 맞춰 가지고 표현을 보다 정교하게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본 개발 사업은 저희 부도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25년도까지 R&D 사업을 했는데 그것까지 하고 그냥 이것은 마무리를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사항 부분은 계속 존치한다는 전제하에서 타 기금으로 이관한다든지 아니면 26년도 예산을 감액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25년도까지 하고 종결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제안말씀을 드린다면 ‘본 개발 사업은 25년도 종료되는 사업으로 26년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앞으로 화석 활용 연구개발 사업 추진 시 사업 추진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이런 수정 문구로 혹시 받아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 취지에 공감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국토부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지혜 위원** 지적사항을 다 수용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44페이지는 사업이 올해 종료가 되니까……

○**국토교통부정책기획관 이상일** 그걸 존치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문맥을 잡아 주셨는데……

○**박지혜 위원** 그걸 반영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소희** 아까 문구를 어떻게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신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정책기획관 이상일** 제가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김태병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소영 위원님께서 본 사업이 석탄가스화기술로 수소를 생산하는 것과 유사한 화석연료기술 R&D라고 하셨고 그리고 석유코크스 100만t을 투입한 수소 생산량이 15만t에 불과해 사업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셔서 이제 이 사업을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이관하고 2026년 예산을 감액하라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은 2021년에 시작돼서 2025년에, 원래 올해 말에 끝나게 되어 있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이 사업은 종료될 사업이고 향후에 화석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 시에는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지금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수소 중에 그레이수소라고 하는 것은 석탄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든 수소지만 저희가 청정수소라고 얘기하는 블루수소하고 그런수소는 청정한 수소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프로젝트는 그레이수소가 아니라 청정수소에 해당하는 블루수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정부가 수립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도 보면 2030년 기준으로 그레이수소가 94만t, 블루 75만t, 그린수소 25만t으로 2030년에도 여전히 그레이가 한 절반을 차지하고 블루와 그린이 50%를 차지하고 있고 2050년에도 그레이수소는 0으로 하지만 블루수소가 200만t, 그린수소 300만t으로 할 정도로 여전히 블루수소를 어느 정도 가는 과도기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연구용역이 완전히 잘못된 그레이수소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레이수소에서 그린수소로 가는 중간 과정에, 그린이 현재 0.1%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레이가 96%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청정수소도 사실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코크스를 활용하는 청정수소가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연구가. 그래서 그 과도기적인 시간에 저희 연구용역을 통해서 블루수소를 생산하는 연구를 5년 동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는 연구용역은 그린수소 쪽으로 본격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의 코크스 관련 연구를 하지 않으려고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 코크스 연구가 그레이수소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블루수소를 생산해서 그 과도기적인, 적어도 한 2025년에서 2050년 가는 사이에 블루수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일부 활용되기 위한 기술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셔서 저희는 이 부분을 사실 시정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제도개선으로 보고 일단 그래도 화석 관련 연구는 앞으로 그런으로만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더 이상 연구용역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측면을 수용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도 본 개발 사업은 2025년 종료되는 사업으로서 26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고 앞으로 화석 관련 연구개발 사업 시에는 사업 추진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하시고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받아들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전국 12곳에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12곳을 이미 지정을 다 했고요. 여기에 공동주택, 수소연료전지, 산단, 모빌리티, 바이오매스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물론 저희는 그린수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루수소도 일정 부분, 그 과정에서는 과도기적 단계로 아까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2030년 기준으로 블루수소가 75만t 일부 쓰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연구용역이 사실 이런 시정 정도가 될 잘못된 연구는 아닙니다. 그 과도기적인 연구로 해서 이후에는 저희 부처에서 그린수소 쪽에 본격적인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소희 자세히 설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린수소로 가는 과도기에 블루수소에 관한 연구용역은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하는 트렌드니까 적절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블루수소를 하겠다는 목표에 해당되는 연구 결과가 어떤지, 25년 마무리잖아요. 그 결과에 대한 내용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김태병 간략히 보고드리면 저희가 올해 태안에서 이것에 대한 실제 실증화 사업을 합니다. 올해 20t에 해당하는, 코크스를 1일 20t을 집어넣어서 1일 3t의 수소가 나오면 이 3t이라는 게 수소차 500대를 하루에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수소가 한 대당 6kg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일단 당분간 그린수소가 아직 0.1% 이내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도기적인 때 저희는 한 1% 수준으로 블루수소를 생산해서 하는 것을 태안에서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서산에서 한 해에 코크스가 약 120만t이 생산이 됩니다. 그 120만t 중에 60만t은 시멘트 산업에 쓰이고 있고 나머지 60만t은 거기서 자체 생산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멘트 쪽에 이게 쓰이면 CO<sub>2</sub> 가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 CO<sub>2</sub> 를 자체적으로 탄소 포집·저장을 하기 때문에 거의 99.99% 순도로 CO<sub>2</sub> 를 다 통제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블루수소로 쓰이는 게 훨씬 친환경적이고요.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서산에서 나오는 120만t 중에 60만t을…… 그런데 초기에는 설비가 아주 조그마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용화를 한다 하더라도 태안에 있는, 산업부에서 이미 구축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이제 시범적으로 20t을 집어넣어서 코크스 20t으로 수소 3t을 마련해서 약 500대의 수소차에다가 공급하는 이런 부분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일단 이 부분을, 서산 인근에 저희 수소 시범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소 시범도시의 공동주택이나 수소연료전지, 산단, 모빌리티 이런 쪽에 저희가 우선 블루수소를 공급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용역하고는 상관없이 가는 것입니다.

#### ○ 소위원장 김소희 도움이 되셨을까요?

○ 박지혜 위원 계속 말씀하시니까 무언가 그 사업에 대해서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 해당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그냥 의원실로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석유코크스에서 수소를 생산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디에 저장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중단, 이 예산을 활용하는 건 중단되는 건데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김태병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전문가들로부터 확보해서 상세한 내용을 저희가 내년에 사업하려고 하는 부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내에는 저희가 하루에 석유 코크스 20t 이거를 활용한 합성가스 생산, 고도정제, 수성가스 전환, 고순도 수소생산 실증 플랜트 여기에 따라서 실증운전을 합니다.

태안에 실증 플랜트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추가적인 탈황 보강, 그러니까 탈황을 시킵니다. 그리고 CO를 수소로 전환하는 내용 그리고 수소를 분리해서 별도로 저장하는 이런 부분들을 설비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에 따라서 저희가 하루 20t의 코크스를 넣었을 때 하루 3t의 수소가 나오느냐를 연구의 성과지표로서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내년 이후로는 일단은 별도의 예산을 일반회계나 여기에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태안 쪽에 이런 부분들 시도를 해 보고, 사실 그린수소가 저희가 더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린수소 쪽으로 가야 되지만 현재 지금 여기에 블루수소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예산 계획이나 이건 반영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박지혜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김태병 예, 그래서 저희는 다만 이것이 만약에 시정으로 가게 되면 이 연구가 전부 엉터리였던 것처럼……

○**소위원장 김소희** 제도개선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김태병**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제가 요청 주신 내용 바탕으로 다시 한번만 확인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석유 코크스 활용 수소 생산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26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향후 화석 활용 관련 연구개발 추진 시 사업 추진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이렇게 내용 담으면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정책기획관 이상일** 예, 좋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정책기획관 이상일**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다음 새만금개발청 보고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45쪽에 새만금개발청 사업 1건입니다.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 시범산단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와 22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에도 예산 불용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자체 변경 등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그러나 24년 계획액 대비 집행률이 24.8%에 불과하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세목 간의 변동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그래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새만금개발청 의견 주시지요.

○**새만금개발청신산업전략과장 김현주** 새만금개발청 신산업전략과장 김현주입니다.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단 추진에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의 및 제도개선에 대한 답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24년 예산편성 시 조달청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를 미계상하여 1000만 원을 세목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기설계 발주 과정에서 조달청의 분리 발주 요구에 따라서 6개월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3억 3300만 원이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일정 관리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사업 관리가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지적이 됐는데 왜 시정이 안 된 거예요?

○**새만금개발청신산업전략과장 김현주** 23년도에는 저희가 건축설계 공모를 했습니다. 건축설계 공모를 했는데 그 입찰자가 1개 업체밖에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바뀌게 됐고 그래서 설계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짹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용이 되었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2023년은 그렇다치고 2024년은 왜 그런 거예요?

○**새만금개발청신산업전략과장 김현주** 24년에는 원래는 5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전기공사 설계를 5월 달에 발주를 했는데 22년도에 전력기술관리법상 전기공사에서 토목이라든가 이런 타공정에 대해서 분리 발주하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에서 보기에는 그 전력공사를 하기 위한, 매설하기 위한 터파기라든가 되메우기 이런 것은 한 공정이 아니냐 저희는 그런 입장이었고 조달청은 그래도 분리 발주를 하는 게 맞다 서로 이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율하는 과정에서 한 6개월이 소요됐습니다. 그 바람에 11월에 그게 확정이 돼서 발주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이거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돼 있는데 주의를 받으시겠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주의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지혜 위원 그러니까 이 스마트국가시범산단 구축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요. 이게 수년째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생각,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괜찮은 건가요?

○새만금개발청신산업전략과장 김현주 그런 건 아닙니다.

○박지혜 위원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새만금개발청신산업전략과장 김현주 저희 계획대로 22년 7월 달에 기본계획이 수립 됐고 작년까지 건축설계가 완료됐고 전기설계는 올해 완료가 됩니다. 그에 가지고 올해 9월 달부터 착수가 돼서 내년 하반기까지는 건축 공사를 완료하고 전기공사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이게 원래 목표했던 시점인가요?

○새만금개발청신산업전략과장 김현주 당초 목표했던 시점은 26년 말입니다.

○박지혜 위원 당겨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새만금개발청신산업전략과장 김현주 아닙니다. 당초 계획대로 26년 말……

○박지혜 위원 예, 26년 말.

○소위원장 김소희 계속 지지부진한 사업 맞고 저는 시정 수준인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주의까지 주셔서 주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혜 위원 예.

○소위원장 김소희 주의를 수용하겠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제대로 잘해 보시지요.

○박지혜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그러면 마지막 사업 주의로 수용하고.

저희가 지금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결 전에 기획재정부 건 부대의견 14건이 있고.

혹시 지금 페이지를 보고 계실까요, 위원님들? 46페이지 추가할 수도 있나요, 부대의견? 지금 모니터에 올라가 있는 내용 보시고 추가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의견 주시고요. 부대의견에 추가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 또 의견 주시면 됩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부대의견 다 한 번씩 검토해 봐 주시고요.

위원님들 검토하실 동안 부대의견에 관해서 지금 각 부처의 담당자분들께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수용이나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다 사전에 주시기는 하셨지만 또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러면 기획재정부부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수용을 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의 목적성에 기반하여 기술개발, 인프라, 녹색금융 등 필수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재편하고’ 여기까지는 수용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다음 부분, 성과 관리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가 탄소중립법에 기후대응을 별도로 성과 평가하자는 법안이 지금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전체 재정 평가 시스템하에서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연간 지표를 추가하거나 성과 지표를 개선하는 거를 조치하기보다는 그 부분을 ‘기후대응기금의 성과평가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고 수정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법안의 개정 연계와 함께해서 검토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의 경우에는 ‘기재부는 기후대응기금 편성 과정에서 다른 회계와 차별화된 사업을 구성하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다음에 ‘2030년까지 기후대응기금을 20조 원 규모로 확대하며’, 20조 원 규모 이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대하되 아까 전에 앞에 그와 비슷하게 ‘대폭 확대하며’로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사업의 책임성 강화 방안 마련 및 종합적 성과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를 ‘사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성과 관리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앞부분의 두 번째 동그라미도 개선 방안은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한다’로 통일을, 맞춰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기획재정부는 기금관리 주체인 기재부와 사업 수행 부처의 이원화로 지출계획은 기재부가, 집행은 각 부처가 수행하면서 책임이 분산되고 있으므로’,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기후특위에서 기금 운용과 성과 관리 일원화 방안을 검토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검토의 내용은 좋습니다. 검토의 주체가 지금 기재부와 기후특위 두 가지 주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재부가 먼저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기후특위는 굳이 넣지 않더라도 이 문장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그다음에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 세입·세출 중장기 전망을 국회에 정례 보고하고’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앞서 2시 초반에 시정조치 사항 요구할 때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로드맵을 만들기로 저희가 시정조치 사항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조치 사항으로 갈음하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중장기 전망 국회 정례 보고와 배출권 가격·거래량 시나리오에 따른 것을 제출하는 걸 다 통으로, 앞서 7페이지에 반영돼 있는 시정조치 사항으로 갈음해 주시면 중복적인 일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동그라미 ‘기재부는 기후대금기금운용심의회가 단순 재원배분·계획 심의에 그치지 않고’ 이 부분에서 ‘단순’을 빼고요 ‘재원배분·계획 심의에 있어 역할을 확대하고 회의 운영을 서면 중심에서 대면 심의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합니다.

다만 그 가운데 ‘부처별·사업별 집행성과 검토 및 환류’라는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성과 평가와 연계돼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내

년에 당장 이 심의에서 집행 성과 검토를 하기에는 여전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빼고 그냥 ‘역할을 확대한다’라는 표현과 ‘서면 중심에서 대면 심의 중심으로 전환’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는 등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여 운영한다’로 해 주시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다만 이 뒷부분 회의록 부분은, 사실은 모든 회의체는 차관급 이상의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반복하지 않더라도 그 법규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므로 이거는 삭제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으로 ‘기획재정부는 산하에 기후대응기금을 집행·관리하는 독립된 전문기구를 설치하여 사업 선정 등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우선순위를 배분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전문기구라는 게 사실 기후대응기금 센터는 기획재정부에서 전체적인 역할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하에’를 빼고요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을 집행·관리하는 기후대응기금 센터의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로 해 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현재 운영 상황으로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재원 배분 기능 이런 거는 정책 부서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 기재부가 그 센터랑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서왕진 위원님의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기후대응기금 선정 기준과 이관 기준의 모호성과 편차를 해소한다라는 부분은 앞부분 같은 부대의견 네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위성곤 위원님의 기후대응기금 사업 선정 기준과 일관된 이관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과 사실상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위성곤 위원님 문구로 통합해도 저희는 동일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후대응기금의 프로그램과 사업별 성과지표가 통합되지 못하고’ 이 부분도 다시 성과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있는 두 번째 동그라미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후대응기금의 성과평가체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로 통합해 주시면 동일한 내용으로 저희가 잘 집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있는 ‘기획재정부는 환경개선특별회계와 취지와 더 가까운,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선별 인프라 확충을 타 회계로 이관한다’는 거는 개별 사업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기재부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 주체가 환경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 의견을 들어 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있는 이소영 위원님의 ‘해외 유사 기금들을 참고하여 기후대응기금의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좁히고 기금만의 독창적인 사업을 구성한다’는 이 방안은 앞부분 총괄 편의 2페이지 시정요구사항에 있는 기금의 운용을 좀 더, 관계없는 건 이관하고 새로 운 걸 개발한다는 지적사항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앞에 시정요구사항이 있으므로 부대의견보다 오히려 시정요구사항으로 통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바우처 이 부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에특기금하고 전력기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여기서 결산의 부대의견으로 담기에는 상황상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은 삭제 의견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종민 위원님의 주신 옥외 LED 교체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소통

하는 부분은 저희가 소통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중간에 있는 지자체에 민투 유치 전략 설명회를 하라는 거는 민투 사업으로 포함되었을 경우에 주무관청이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아직 이 부분이 민투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부분을 삭제해 주시고 ‘옥외 LED 교체와 관련해서 지자체와 소통 및 정책협력을 강화한다’고 해 주시면 저희가 소통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기재부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제가 이 내용을 다 풀로업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도 작성율을 다 못 하셨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의견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좀 효율적으로 빨리 끝낼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이 작성된 내용을 읽으신 건가요, 차관님께서? 그러면 저희가 복사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부대의견에 대한 입장을 드린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몇 가지 삭제를 요청하는 부분이라든지 통합해야 된다 일리 있는 내용이 있지만 그걸 지금 다 반영을……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어쨌든 위원님들과 다 합의를 한 다음에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건건에 대해서 그래도 합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토론을 해 주시고 그 내용에 동의를 하시면 문구는 저희가 따로 협의를 더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볼까요?

자료가 혹시 있는 걸 읽으신 건가요, 아니면 수정하신 거를……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닙니다. 저희가 앞부분에 반영된 걸 또 반영했기 때문에 정리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그러면 뒤의 다른 부처 의견을 듣는 동안 정리해서 저희 주시면 저희가 복사한 걸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의견 드려서 부대의견 합의 의결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그다음 번에는 산업부, 산업부 부대의견 건은 지금 9건이 들어왔네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이승렬입니다.

48페이지에 있는 산업부·기재부 같이 있는 부대의견 9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옥외 가로등 LED 교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편성하여…… 배출의 절감을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삭제를 건의드립니다.

이유인즉슨 지방자치단체 LED 교체와 관련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 사업이 산업부에도 이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이나 ESCO 사업. 그래서 신규 사업을 편성한다는 얘기가 조금 적절치 않다는 생각에 이거는 삭제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하고 세 번째 동그라미는 회계 이관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인력양성(R&D) 사업, 세 번째—49페이지 첫 번째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산업계순환경제기반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이관한 점을 고려하여 다른 회계로 사업을 이관한다’ 이렇게 지적을 주셨는데 회계 간의 이관은 저희 산업부가 답변을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재정 당국이랑 상의를 드려야 될 텐데 이거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 부대의견에서는 빼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두 번째 동그라미 서왕진 위원님, 세 번째 동그라미 서범수 위원님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네 번째 동그라미의 경우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축소한 BAU 방법론에 대해 사용 이유를 설명하고 2035 NDC 수립 과정에서 사용하는 방법론 및 사용 방법과 마련된 수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공개하며 대책을 설명한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저희가 설명은 언제든지 또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는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저희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요 이 공개 여부는 환경부랑 같이 정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부처 간의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어서 이 부대의견에서는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결산의 내용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는 점도 한번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다섯 번째 동그라미의 경우는 이견이 없습니다. 저희가 의원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은 아까 이미 말씀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0%의 실질 유상할당 비율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부대의견에서는 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50페이지 첫 번째 동그라미의 경우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시 3기 잉여량을 예비분으로 설정하여 배출권 과다공급을 막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비분으로 설정하는 등의 내용은 결산 부대 사항이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바 이 부대의견에서는 제외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산업부 건 관련해서는 비교적 간단해서 지금 이 내용 보시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실제로 LED 교체 관련해서는 산업부가 이미 충분히 다른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셔서 이 내용은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박정현 위원님이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이거를 뺀다기보다는 어쨌든 기금을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신 의견을 좀 반영해서 내용을 수정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관 부분은 실제로 기재부랑 논의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렇게 하면 아무 데도 넣을 데가 없습니다, 여기 이 내용은.

**○소위원장 김소희** 적절한 문구를 좀 찾으면 어떨까요? 이게 에너지인력양성 사업 부

분이 기후대응기금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정현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2개 다, 에너지인력양성 사업도 그렇고 산업계순환경 제기반구축도 기후대응기금에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다른 회계로 넘겨라 이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올려요?

○**소위원장 김소희** 그러면 이 두 사업은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예산, 기금 사용의 원칙을 정해서 다시……

뒤의 ‘이관한다’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를 산업부에서는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남기되 이 내용을 산업부와 기재부가 고민할 수 있게끔……

○**박지혜 위원** 이관을 검토한다.

○**소위원장 김소희** 그 적절한 단어를 찾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는 본인들이 그걸 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삭제해 달라는 거잖아요. 재정 당국에서 해야 되는……

재정 당국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 이승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기획재정부’를 넣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소희** ‘기획재정부는 이 내용을 기후대응기금에 맞는지 검토한다’ 이렇게 해서 추가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재부 안에 1차관이 있고 2차관이 있습니다. 예산을 하는 건 주로 2차관과 부총리께서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실하고 지금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용 부분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숙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그런데 이제 마냥 이렇게 평통을 치실 수는 없으니까 그냥 ‘다른 회계로 이관을 검토한다’ 정도로 뒷 문장만 바꾸시지요. 그리고 논의를 부처에서 하시면 어떨까요?

○**박정현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그래야 논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왕진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거는 오케이 하셨고.

NDC 수립 과정 이 내용은 지금 여기에는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예산결산기금……

○**박지혜 위원** 김정호 위원님 의견 말씀이시지요?

○**소위원장 김소희** 예.

삭제를 요청했던 거지요? 실장님, 맞나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 이승렬** 예, 맞습니다.

○**박지혜 위원** 이 내용을 해당 위원님께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위원장 김소희**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박지혜 위원** 근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 이승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산중위 위원님이 시

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설명은 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철회의 취지는 거기 보면 근거 자료를 공개한다든지, 이게 저희도 정부부처 내 환경부랑 같이하는 업무다 보니까 산업부 부대의견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좀 적절치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여기 안 들어 있어도 저희가 당연히 드리는 거니까 그런 취지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박지혜 위원** 이 내용 자체는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BAU 방법론을 쓰지 말았으면 하는 취지에서 기존에 BAU를 사용한 이유, 그다음에 앞으로 또 계속 그걸 쓸 건지 이런 취지에서 문제를 제기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산업부에다가 부대의견을 여기 이렇게 다신 것으로 보이고.

관련한 내용을 해당 의원실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뺀다고 하면.

○**소위원장 김소희** 설명은 드리실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 이승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해서 여기서는 내용을…… 기금 의견제시의 건이다 보니까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형배 위원님 것은 살리시고, 아까 ‘할당계획 수립 시’ 이 내용은 앞서서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일하게 똑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 달라고 말씀 주셨지요? ‘3기 잉여량을 예비분으로’, 이게 산업부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그래서 넣으신 것 같은데?

○**박지혜 위원** 산업부에서 반대하시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 이승렬** 아니, 저희가 지금 반대한다는 건 아니고요. 3기 잉여량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이 부분은 산업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물론 그것은 맞지요.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한다’라고 단어를 쓴 거 아닐까요, 삭제까진 아니더라도 산업부에서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배출권거래제 관련된 소위랑 같이 있다 보니까 전부 다 들어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적절한 단어를 좀 찾아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 이승렬** 여기에 두신다면 ‘환경부는……’, 이게 환경부도 좀 여쭤는 봐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소위원장 김소희** 그래서 환경부까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 이승렬**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시 3기 잉여량을 고려한 예비분을 설정하여’ 이 정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냥 그대로 설정한다기보다는 ‘잉여량을 고려하여’, ‘고려하여’라는 말만 추가하는 걸로 의견을 좀 여쭙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좋습니다. 배출권 과다공급 막아야지 원래의 목적대로 가는 거니까요 그 부분 다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박지혜 위원** 기금의 수입을 확보해야……

○**소위원장 김소희** 그러면 산업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환경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입니다.

49페이지의 실질 유상할당 비율 부분은 언급이 됐으니까 생략하고, 다음에 이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잉여량 예비분 부분도 고려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부분에 이현승 위원님께서 제시한 집단에너지사업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51페이지에 서범수 위원님도 집단에너지 관련된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집단에너지 관련돼서 형평성이나 역차별 문제 같은 경우는 기업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이를 둘 다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정도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지금 현재도 ‘검토한다’로 돼 있는데요.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51페이지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어서 둘 다 ‘검토한다’ 정도로 해 주시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임이자 위원님의 두 가지, COP30까지 NDC 확정하는 부분과 중소기업 완화 방안 이건 수용하겠습니다.

또 서왕진 위원님의 두 가지 안건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범수 위원님께서……

○소위원장 김소희 위의 내용이랑 같은 거지요?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예. 두 번째 것이 있는데요. 기획재정부·환경부는 암모니아·수소 혼소 발전과 같은 대규모 탈탄소 프로젝트를 기후대응기금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범위나 내용은 기재부·환경부 등과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여기에 암모니아와 수소 혼소 발전을 특정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구를 좀 수정하기를 제안합니다. ‘기획재정부·환경부는 대규모 탈탄소 프로젝트를 기후대응기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산업계의 탈탄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또는 인센티브 신설 방안을 검토한다’ 정도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서범수 위원님의 제안하신 우리나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와 관련된 내용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 것도 수용하고.

서범수 위원과 조은희 위원께서 ‘기획재정부·환경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비감축성 사업 예산을 재조정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환경부는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된 주무 부처가 아닌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감축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의, 기후특위 결산임을 고려할 때 비감축성 사업예산 재조정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사업전환 투자 비중 확대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부분은 삭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차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위기 적응 및 예방에 대한 정책은 수용하겠습니다.

또 김정호 위원도 유사한 취지의 것입니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염태영 위원 안 중에 두 번째 것은 ‘기획재정부·환경부는 일회용 빨대 관련 정책 혼선으로 피해를 입은 관련 업체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친환경 시장 확대를 위해 규제 복원을 검토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님의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저희도 강득구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플라스틱 빨대 규제 계도 기간 운영에 따라서 기업이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이빨대 업체 보상

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보상까지 언급하는 것보다는 ‘지원을 실시하고’라고 수정해 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원은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태영 위원님께서 환경 교육 내실화 관련돼서 제시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취지를 공감합니다만 환경 교육시간 및 교사 부족에 대한 부분들이 주관 부처가 교육부입니다. 그래서 문구를 ‘기획재정부·환경부는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학교 환경 교육 내실화를 지원한다’ 정도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환경부 소관 사항은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이것도 바로바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혹시 환경부 제안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박지혜 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비교적 동의하는데, 그래도.

○차지호 위원 부대의견 좀 추가해서 얘기를 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김소희 환경부 부대의견을 추가하시겠다는 겁니까?

○차지호 위원 아니요. 내용들,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기획재정부·환경부는 중장기 기후평가와 기후위기 적응·예방의 정책을 강구한다’ 이렇게 있고 김정호 위원께서 비슷한 의견을 내셨는데 기후변화적응 사업에 대해서 투자 비중을 늘리고 기후적응을 기후위기 대응기금의 핵심 운용 방향 중 하나로 설정한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용한다고 하셨으면 사실 이걸 2~3% 늘릴지 아니면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늘릴지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대의견을 달면 일단 유럽이나 주요 선진국, 지금 미국은 좀 이상하게 가고 있어서 미국 빼고, 유럽 기준으로 기후대응기금에 기후 적응 쪽에 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적어도 최소한 30% 정도 될 거고 보통 40~45%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들에 대해서 제 부대의견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김정호 위원님도 구체적으로 수치는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핵심 운용 방향 중 하나라고 하면 그 목표는 이제 주요 선진국의 구성 비율과 유사하지 않나 싶어서 부대의견 첨부합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실장님, 의견 주시지요.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혹시 한마디만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소희 예.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저희가 아까 염태영 위원님 말씀드리면서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뒤에 ‘친환경 시장 확대를 위해 규제 복원을 검토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해외 규제 동향이나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서 방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친환경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정도로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연구용역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수정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염태영 위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보통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수정된 내용들이 오면 그 의

원실의 검토를 받고……

○**박지혜 위원** 어차피 여기 소위 위원이 아니시잖아요.

○**소위원장 김소희** 그냥 남기기만 하면 돼요,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박정현 위원** 제가 염태영 위원님은 아니지만 어째든 앞의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는데요. ‘친환경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나 ‘규제 복원을 검토한다’나 어쨌든 검토 아닙니까? 위의 것이 조금 더 강력하게 하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의 그 문구로 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실은 이 규제 내용에 대해서 지금 환노위에서 검토 중이고요.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다른 의견을 제시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도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빨대 사용량을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가자, 종이빨대가 친환경 빨대라는 그런 이퀄(equal)이라는 그 내용을 전제로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드렸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환경부가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규제대로 가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차원이니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친환경 시장 확대의 방안을 검토한다’가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기존의 규제로 복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기존의 규제로 복원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대체로, 원칙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강득구 위원**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아직 진행 중이고 제가……

○**강득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용역 줬으면……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연말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이 사업이 그렇게 과제가 많나요? 어쨌거나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예, 청문회 때 장관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제도에 대한 기본설계를 다시 검토하겠다라는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득구 위원** 혹시 중간보고 받았나요?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제가 직접 담당이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강득구 위원님께 중간보고가 있으면 저도 좀 받고 싶네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지요.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좀 보고……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알겠습니다. 진행 상황을 요약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이거지요. 어쨌거나 종이빨대가 친환경 재질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떠나서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가는 것은 원칙이다 이런 것 아닌가요?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맞습니다. 빨대 사용량을 감축, 그러니까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하는 큰 틀에서 다시 고민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 거라……

○**박지혜 위원** 일회용 빨대만 하는 것도 아니지요? 일회용품 보증금제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소희** 예, 그것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검토한다’가 마지막 어미여 가지고 사실 저는 크게 문제가 있을까 싶은데 규제 복원에 대해서 계속 이견이 있다고 하면 ‘규제 방향을 검토한다’든지……

○**박정현 위원** 방안? 방향?

○**박지혜 위원** 방안,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조금 더 중립적으로 보이는……

○**소위원장 김소희** 어쨌든 규제는 필요하고요. 친환경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 방안, 지금 하고 계시는 것도 새로운 규제를 만드시는…… 저는 비용 추가였거든요, 거의. 그래서 여기 지금 빼시는 것들은 빼고 아까 전기요금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그러면 됐나요? 추가적으로……

○**박지혜 위원** 이 부분은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대신’만 삭제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비감축성 사업 예산을 재조정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사업전환 투자비중을 확대한다’.

○**소위원장 김소희** 이렇게 되는 것 맞습니까?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예, 맞습니다.

○**박지혜 위원** 다른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다른 의견은 없으신 것 같고요.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기재부 건이 오기 전에 마지막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것 마저 보고 기재부 것 최종으로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대의견에 대해서 의견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정책기획관 이상일**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이상일입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어떤 체계가 사실 돼 있습니다. 사업자가 여러 가지 유사 사례라든지 국제 기준에 따라서 예상 감축량을 먼저 산정하는 게, 원래 업무의 프로세스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정해 주는 부분은 나중에 본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에 제3의 검증기관이 그 실적을 검증해서 실제로 감축한 부분만 실적분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이게 이미 제도화가 사실 돼 있어서, 그런데 웬만하면 저희들 수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세 가지고, ‘예상 감축량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기본 체계가 이렇게 검증하는 체계까지 돼 있고 예상 감축량을 먼저 제시하고 뒤에 검증하는 체계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국회에서 어떻게 해 달라는 요청이신가요?

○**국토교통부정책기획관 이상일** 삭제 의견입니다. 이게 사실은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을 한다면서 예상 감축량까지 안 하고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기재부라든지 관계 기관 협의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기본을 안 갖추고 사실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센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에 대해서 예상 감축량을 고려해서 사업을 발주하고 있으니 삭제보다는 이 내용을 조금 고려하고 있다라는 방향으로 수정의견을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완전 삭제보다는.

○**국토교통부정책기획관 이상일** 그러면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을 제시하고 향후 본 사업 추진 시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제 감축한 정도를 검증하여야 한다’라든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지만 앞으로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좀 문구를 수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정현 위원** 다시 한번……

○**소위원장 김소희** 그렇게 말씀 주신 대로 내용을 수정해서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정책기획관 이상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을 토대로 향후 본 사업 추진 시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적을 염중 검증하여 반영한다’라든지 그런 문구가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소희** 저는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실까요?

○**박지혜 위원**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을 제시하고 향후 본 사업 추진 시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제 감축량을 검증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국토교통부정책기획관 이상일**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지혜 위원** ‘예상 감축량을 제시하고 본 사업 할 때 제3의 기관이 실제 감축량을 검증하도록 한다’

○**소위원장 김소희** 농촌진흥청 계신가요?

부대의견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농촌진흥청연구정책국장 김병석**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입니다.

저희 청에서 추진하는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작년에 이관했는데, 동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농업기술개발 사업에 부합하므로 기후대응기금에서 다른 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 청은 일부 부분 수용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본 사업은 주로 농업기술개발 사업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중에 하나의 내역사업은 농축산 분야의 탄소감축기술 이행기반 구축을 위한 내역사업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 기후기금에 남기고 나머지 내역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것으로 재정 당국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농촌진흥청연구정책국장 김병석** 농축산 분야 탄소저감기술 이행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김소희 이 건 관련인가요?

○이소영 위원 예.

○소위원장 김소희 예.

○이소영 위원 말씀하신 사업이 원래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되기 전에는 어떤 계정에서……

○농촌진흥청연구정책국장 김병석 일반회계에 있었습니다. 주요 R&D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탄소중립과 관련된 내용인데 일반회계로 추진이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농촌진흥청연구정책국장 김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알고 계시겠지만 기후대응기금이 수입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라 예수금까지 끌어다 쓰고 지금 이자가 계속 나가는 상황인데, 사실 일반회계나 아니면 다른 특별회계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의 경우에 명확한 기준 없이 탄소중립과 관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해서 쓰는 것은 수입의 불안정성이라거나 기금에서의 계속된 이자 지출이라거나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설혹 이 사업 중에 기후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박정현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의견처럼 일반회계나 다른 회계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기재부 차관님께서도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형일 종전에 여러 가지 이관에 대해서는 여기서 바로 결론 내리기 어려우니 ‘이관을 검토할 것’으로 다 수정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같은 쳐지로 ‘검토할 것’으로 해 주시면…… 아마 재정 당국하고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까 똑같은 상황으로……

○박정현 위원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도 다 그렇게 ‘검토한다’로……

○소위원장 김소희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관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재부랑 상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토한다’로 의견을 통일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김소희 그러면 일단 다른 부처 것은 다 끝났고 기재부에 부대의견 내신 14건에 대해서 지금 수정의견 온 것이 있으니 이 내용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용을 하시겠다고 했고……

다 받으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옆에 것과 비교해서 보시면 되고요.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의 목적성에 기반하여 기술개발, 인프라, 지원하는 형태로 재편하고’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탄소중립 연간지표를 추가하여 성과지표를 개선하는 등 별도의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이 지점에 대한 수정의견인데요. ‘기후대응기금의 성과평가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의견을 주

셨고 이 내용이 지금 기존의 정부예산 검토 원칙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이것은 이렇게 수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차지호 위원** 필수 분야에 기후적응을 넣어 주시지요. 앞에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서 김정호 위원님께서 낸 안에 기후위기대응기금의 핵심 운용 방향 중 하나로 설정한다는 것에 수용한다는 의견을 펼치셨으니까 그 말이 같은 말이잖아요.

○**박정현 위원** 기술개발, 인프라, 녹색금융 그리고……

○**차지호 위원** 그리고 기후적응. 이 3개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기후적응에.

○**소위원장 김소희** 실제로 지금 인프라 섹션에 해당되는 부분에 적응 지원이 되는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보통 생태전환…… 크게 대응기금 안에.

○**박지혜 위원** 지금 기술개발, 인프라, 녹색금융은 기후대응기금이 어디에 쓰이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그 분야에 투자되는가를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홍보나 이런 류의 사업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기술개발, 인프라, 녹색금융 등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자는 제안으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차지호 위원** 이게 법적으로 안 돼요? 이게 원래 이 워딩 때문에 필수 분야에 기후적응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소영 위원** 제가 한말씀드려도 되겠지요?

일단 지금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용도에는 적응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다만 설립 목적에는 있어서, 일부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안 들어가……

○**이소영 위원**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지난 전체회의 때도 몇 분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고. 지금 기금이 2조 규모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오히려 너무 다양한 용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런 특색 없이 운용이 되고 있는 게 재차 지적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의견을 할 때는 다양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넓히기보다는 조금 더 범위를 좁히는 게 그런 지적 취지에 맞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적응 같은 내용이 들어가면 적응 관련한 어떤 인프라 개선이나 조치들은 단위가 수조, 수십조 정도 되는 단위기 때문에 지금 전체가 2조밖에 안 되는 기후위기대응 기금에서 적응 관련한 소요까지 대응하기는 조금 현실에 맞지 않잖아요.

○**차지호 위원** 아니요, 거기는 저는 굉장히 강한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원장 김소희** 위원님들 간에 합의를 해 주시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차지호 위원** 아, 그래요?

일단 기후대응기금하면서 기후적응 관련해서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기후대응기금의 용처를 저희가 한번 쭉 봤었잖아요. 그런데 2조에서 기후적응이 들어와서 이게 못 쓸 돈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그 참기름 짜는 사업, 별 희한한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 목록을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탄소중립과 기후적응이라는 굉장히 주요한 두 가지 분야에서 나머지 반절을 뺄 문제가 아니고 기후적응과 기후완화라는 2개의 축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항목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까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탄소중립 혹은 기후적응이 두 가지 외의 분야에 쓰이는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자란다면 거기부터 이렇게 해결해야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쓰고 있으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굉장히 중요한 기후적응이라는 축을 핵심 분야에도, 필수 분야에도 못 넣는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박지혜 위원** 아무튼 필수 분야라는 것을 여기서 언급한 취지는 감축과 적응 이런 개별 영역에 대한, 뭐가 필수 분야인지를 선별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오히려 기후대응기금의 목적성에 포함되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법을 보면 ‘기후대응기금의 목적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 여기 이 워딩에 포함되는 게 감축 사업, 적응 사업 이런 다양한 종류의 사업들이 얼마나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이 법문에 기준해서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영역들의 탄소중립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지원할 건가 관련해서 기술개발, 인프라, 녹색금융과 같은 분야에 집중하자는 거라서 저는 여기에 적응을 추가하는 게 위계가 안 맞다.

○**소위원장 김소희** 저도 같은 의견인데, 적응 기술개발이 될 수도 있고요 적응 인프라가 될 수도 있고 적응 관련 녹색금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적응 파트가 따로 뽑아져야 되는 것은 아닌데 말씀 주셨던 내용, 적응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지만 이것은 충분히 적응이 포함된 내용이라고 저는 초반에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지호 위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목적성에 들어간다는 것에 그렇게 되면 저도 이해가 좀 되고요.

그런데 다만 기후대응기금이 처음 설계되거나 논의가 될 때 기후적응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고려가 되지 않고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적응에 대한 수단으로 기술개발, 인프라, 녹색금융이라고 하는데 그게 기후적응 매커니즘에 굉장히 일부만 담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이나 기후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주요한 방법들이 필수 방법들이 될 수가 있는데 적응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기가 조금 잘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이 분야에 담기지 않는다고 하면 이후에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박지혜 위원** 뒤에 환경부 부분에 의견을 넣어 드렸는데……

○**소위원장 김소희** 저는 적응 인프라 하면 굉장히 큰 범위라서 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적용은 어차피 저희가 다음에 전체회의 때도 또 보고를 받잖아요. 그래서 계속 누누이 강조할 거라 앞으로는 좀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차지호 위원** 강조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수정의견을 반영하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2030년까지 기후대응기금을 20조 원 규모로 확대하며’에서 기금의 규모가 숫자로 언급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대폭 확대하며’로 수정을 한 거고, 사업의 나

며지 것은 다 같습니다. 저도 ‘대폭 확대하며’가 현재 상황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페이지의 마지막, ‘이원화로 지출계획은 기획재정부가 수립하고 집행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것은 기후특위 이름만 빼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기금 운용과 성과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돼 있는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주어가 2개라서……

○**소위원장 김소희** 그렇지요. 굳이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넣을 이유는 현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시정조치사항으로 대체 요청 부분에 대해서 수용 여부 알려 주십시오. 저는 수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제가 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회가 단순 재원배분 계획 심의에 있어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회의 운영을 서면 중심에서 대면 심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여 운영한다’, 일단 수용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을 집행·관리하는 기후대응기금센터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견 없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가 삭제 요청인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 박스에 있는 이미 합의된 부대 의견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두 번째 동그라미랑 내용이 같다는 얘기인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렇습니다. 성과 관리 이야기입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수용하고.

그다음 페이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은 환경부와는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아까 전에 이관과 관련된 동일한 원칙으로 ‘이관을 검토한다’ 해 주시고요. 이 앞의 주어에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환경부 해서 소관 부처로 같이 포함해 주시면 환경부도 수용한다고 전달해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어차피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되니까 기획재정부·환경부, 환경부 추가해서……

○**박지혜 위원** 이관을 검토한다.

○**소위원장 김소희** ‘이관을 검토한다’, 똑같이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좌측 이것을 삭제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것 아마 이소영 위원님 제안 내용, 부대의견이었던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것은 본문의 시정조치사항에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반영이 돼 있어서 시정조치 자체가 부대의견보다 더 세지 않을까 싶어서 없어도 되지 않을

까 싶은 의견입니다.

○**박지혜 위원** 그런데 2페이지 시정조치사항으로 대체 요청하셨는데 그 대체를 뭘로 하시겠다는 건지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미 시정조치사항이 있으니까 부대의견에 담지 않으셔도 이것은 그대로 이행된다.

○**박지혜 위원** 그러니까 시정조치사항 어디에 있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국회 자료 2페이지 보시면요 위원님이 제기하신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총괄에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맨 앞의 총괄 파트입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전체적인 기금 용도를 전반적으로 지금 다시 다 보라고 요청을 하셔서 그 내용이랑 큰 틀에서 유사한 내용 아니냐라는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유사 기금을 참고하여’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지점인지, 아마 검토하실 때 해외 유사 기금들을 참고하실 것 같은데……

○**이소영 위원** 앞에 있는 내용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소희** 알겠습니다. 같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특회계 전력기금 사업 내용 부분이니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획재정부는 옥외 LED 교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소통 및 정책협력을 강화한다’, 내용 어때신가요?

의견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대의견을 하나 추가하는 게 아까 고용노동부 건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과 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은 석탄발전 폐지 지역 특별법과 같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석탄발전 폐지지역에 대한 일자리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고민하여 기금 사용 기준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박정현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딴짓하다가 놓쳐 가지고……

○**소위원장 김소희** 말씀해 주십시오. 팬찮습니다.

○**박정현 위원** 환경개선특별회계 취지에 더 가까우니까 재활용 가능 이걸 어떻게 수정한다고 하는 거였지요?

○**박지혜 위원** 그쪽으로 옮긴다.

○**소위원장 김소희** ‘이관을 검토한다’. 아마 기후대응기금이 아니라 폐기물에 적합한 기금으로, 전반적으로……

○**박정현 위원** 이건 워딩은 그대로 가져간다는……

○**박지혜 위원** 워딩을 ‘기후대응기금에서 타 회계로 이관을 검토한다’.

○**소위원장 김소희** 다만 환경부가 관련돼 있으니까 환경부를 추가하고.

됐을까요? 혹시 추가 의견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그러면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하여 주의가 4건, 제도개선 27건을 각각 요구하

고 일부 사업에 대해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성실하게 심사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

### ○출석 위원(9인)

강득구 김소희 김용태 김종민 박정현 박지혜 이소영 조은희 차지호

### ○첨가 위원(1인)

김정호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형일

미래전략국장 유수영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이승렬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 김태병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권순재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 김병석

새만금개발청

신산업전략과장 김현주